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KINU 연구총서 23-01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연구책임자

황진태(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KINU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KINU 연구총서 23-01

---

|         |   |
|---------|---|
| 발행일     | 2023년 8월 31일  |
| 저자      | 황진태   |
| 발행인     | 김천식   |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 편집인     | 북한연구실장  |
| 등록      | 제2-02361호 (97.4.23)   |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 전화      | (대표) 02-2023-8000<br>(FAX) 02-2023-8296                     |
| 홈페이지    | <a href="https://www.kinu.or.kr">https://www.kinu.or.kr</a> |
| 기획·디자인  |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
| 인쇄처     |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
| I S B N | 979-11-6589-142-8 93340                                     |
| 가격      | 7,000원  |

---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책임자가 2023년 9월 1일부로 의원면직되어 본 보고서는 2023년 8월 31일자로 조기 발간되었음을 밝힙니다.

# Contents 차례

|    |   |
|----|---|
| 요약 | 9 |
|----|---|

## Chapter I

|    |    |
|----|----|
| 서론 | 13 |
|----|----|

## Chapter II

|                                |    |
|--------------------------------|----|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논의 | 21 |
|--------------------------------|----|

1. 북한도시연구와 방법론적 도시주의 23
2. 진지전 도시화의 개념적 특성 40

## Chapter III

|                                   |    |
|-----------------------------------|----|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분석: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 61 |
|-----------------------------------|----|

1. 선대의 진지전 도시화의 형성배경 및 특성 63
2.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 분석 68
3. 소결 118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21

참고문헌 ————— 128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45

〈표 II -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북한도시 관련 연구목록 ..... 27

〈표 II -2〉 역대 북한도시포럼 개최 현황 ..... 29

〈표 III -1〉 북한의 1급 도로 현황 ..... 73

〈표 III -2〉 북한의 고속도로 현황 ..... 74

〈표 III -3〉 남한과 북한의 국내이동 인구 ..... 86

〈표 III -4〉 남북한 도로 총연장 및 고속도로 길이 ..... 86

〈표 III -5〉 남북한 자동차 등록대수 ..... 87

〈표 III -6〉 연운회사의 지역별 트럭 보유대수 ..... 92

〈표 III -7〉 노동신문(2012~2022)에서  
“도시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기사의 지역별 분류 및 기사 수 ... 113

〈그림 II-1〉 려명거리 모형건축물 앞에서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의 모습 … 34

〈그림 II-2〉 북한이 송화거리를 주제로 발행한 우표 …………… 36

〈그림 II-3〉 행성적 도시화의 시각에서 아마존의 지도화 …………… 43

〈그림 II-4〉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와 주변국 야경 …………… 44

〈그림 II-5〉 1950~2050년까지 북한·동아시아·아시아의  
도시화를 추세 및 예측 …………… 45

〈그림 II-6〉 가상의 핵공격을 받은 미국의 도시 X …………… 51

〈그림 II-7〉 수도권 의 한 도시에 위치한 정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 …………… 52

〈그림 II-8〉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시험으로  
촬영했다며 공개한 수도권 일대 사진 …………… 54

〈그림 III-1〉 북한의 주요 도로망 …………… 71

〈그림 III-2〉 평양향산고속도로의 건설 중단된 향산-희천 구간 …………… 77

〈그림 III-3〉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 보도기사 …………… 81

〈그림 III-4〉 평양남포고속도로 구간 주변에 신축된 살림집 단지 …………… 81

〈그림 III-5〉 평양남포고속도로의 평양 진입부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진입부 …………… 87

〈그림 III-6〉 도시별 집중 생산 상품의 분포도 …………… 91

〈그림 III-7〉 평양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에서  
김정은의 위업을 찬양하는 기사 …………… 97

〈그림 III-8〉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수도 평양의 발전에 대한 정론 …………… 98

〈그림 III-9〉 송화거리 건설을 앞두고 군민대단결을 강조하는 선전화 …………… 100

〈그림 III-10〉 살림집 건설현장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제 폭발물 발견 보도 …………… 101

〈그림 III-11〉 노동신문(2012~2022)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별방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기사 수 … 105

|   |     |
|---|-----|
| 〈그림 Ⅲ-12〉 “도시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지역의<br>전반기(2012~2016)/후반기(2016~2021) 시계열 변화 … | 114 |
| 〈그림 Ⅲ-13〉 “도시부럽지 않은 농장마을” 제목의 노동신문 기사 ……………                             | 117 |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을 설명하기 위하여 진지전 도시화를 개념화한다. 둘째, 진지전 도시화 개념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진지전 도시화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한 담론의 특성과 공간적 구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대효과는 북한연구자들이 북한도시를 보다 관계적으로 접근(도시의 내부-외부 관계, 도시-도시 관계, 도시-비도시 관계 등)하고, 그동안 북한도시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다양한 논리와 전략들(군사적, 지정학적 측면 등)로 분석의 시야를 확장할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인 I장에 이어 II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논의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학에서 북한도시연구의 의의를 평가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에서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성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적 도시주의적 성찰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북한도시에 대한 영역적 이해를 벗어나 도시 안팎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돕는 행성적 도시화론과 군사적, 지정학적 요인들과 도시공간의 관계에 주목한 도시지정학을 검토한다. 끝으로 진지전 도시화의 개념적 특성을 세 가지 측면(1) 분산된 도시 간 구성,

2) 도시 간 교통 인프라의 불균등한 발전 양상, 3) 진지전 도시화를 정당화하는 담론의 역할)에서 논의한다. 사례분석인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추상적으로 논의된 진지전 도시화 개념을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여 개념의 유효성을 검증하려 한다. 먼저,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의 원형인 선대의 진지전 도시화의 형성배경 및 특성을 살핀다. 다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를 세 가지 측면(즉, 1) 지역의 자력갱생을 위한 도시 간 분산된 공간구조, 2) 평양에 집중된 불균등한 도로망(특히, 고속도로), 3) 진지전 도시화를 정당화하는 담론의 출현(가령, "도시부럽지 않은"))에서 살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한다.

**주제어:** 진지전 도시화, 북한도시, 김정은 정권, 방법론적 도시주의





# The Kim Jong-un Regime's Urban Spatial Restructuring Strategy: A View from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Hwang, Jin-T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conceptualize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urban spatial restructuring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and spatial composition promoted by the Kim Jong-un regime are then discussed to verify the validity of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as a concept.

As a result of this study, researchers will be able to analyze North Korean cities from a more relational perspective (e.g., the internal-external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cities, city-to-city relationships, city-non-city relationships, etc.) and recognize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heir analysis to explore various logics and strategies (e.g., military, geopolitical, etc.) that have not been highlighted in previous research.

This research consists of four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II discusses theories that have been employed to analyze the Kim Jong-un regime's urban spatial restructuring. More specifically, it evaluates the significance of North Korean urban

research in North Korean studie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a reflective approach to methodological cityism in future research. Subsequently, based on a reflective understanding of methodological cityism, planetary urbanization, which goes beyond a territori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ities to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ssociated with cities, and urban geopolitics, which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and geopolitical factors and urban spaces, are examined. Lastly,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are discussed from three perspectives: 1) the decentralized inter-city composition, 2) the uneven development of intercit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3) the role of discourse that justifies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Chapter III verifies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at a more concrete level. First, it examines the formation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of the Kim Il-sung and Kim Jong-il regimes, which are the prototypes of the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of the Kim Jong-un regime. Next, the Kim Jong-un regime's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is discussed from three aspects: 1) the dispersed spatial composition between cities for regional self-reliance, 2) the uneven road network concentrated in Pyongyang, and 3) the emergence of discourse that justifies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e.g., "Not envious of the city"). Finally, Chapter IV summariz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Keywords:** 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 North Korean Cities, Kim Jong-un Regime, Methodological Urbanism

---

# I. 서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서론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비교하여 김정은 정권의 차별성을 손꼽으려면 ‘도시의 시대’라 칭할 정도로 북한도시의 공간재편이 매우 역동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초중반기에 건설된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부터 집권 10년 차를 지나는 시점에서 시작된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계획과 원산-갈마 관광지구, 삼지연시와 같은 지방도시 개발, 농촌살림집 건설까지 도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김정은 시기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의 도시화는 북한 외부의 시선도 사로잡았다. 대표적으로 해외 유력언론에서 평양의 도시경관 변화를 뉴욕 맨해튼과 비슷하다며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도 변화에 대한 체감이 상당했음을 방증한다(The Guardian 2015.7.8.; The Washington Post 2016.5.14.). 북한학계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선도적으로 북한도시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최완규 2004),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집합연구(고유환 2015)를 중심으로 북한학, 사회학, 역사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지리학 등 여러 전공자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국책연구기관도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통일연구원은 2018년부터 북한도시포럼을 조직하여 매년 학

술행사를 개최했고, 정규연구과제로 북한도시를 다뤘으며, LH토지주택연구원은 『북한 건설·개발동향』, 『북한토지주택리뷰』와 같은 정기간행물을 2010년대 중반부터 발간하고 있다. 북한발(發) 도시의 시대가 오면서 한국에서 북한도시연구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북한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은 북한도시를 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왔다. 북한연구의 필연적 제약들(자료접근의 한계, 현장답사의 불가능)은 북한도시연구에도 작용했지만, 적지 않은 박스를 여는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양적, 질적 성과가 축적된 현시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박스를 여는 데 집중하다 보니 박스의 크기가 왜 서로 다른지, 박스 간의 관계가 박스 안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와 같은 질문들이다. 도시를 박스처럼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한 영역적 용기(territorial container)로 간주하는 인식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연구들에서도 확인된다.

도시의 형성(또는 쇠락)은 도시 내부의 자원, 인구, 인프라(infrastructure) 등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시 밖의 다른 도시 및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평해튼이라는 용어는 북한도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북한도시연구를 촉발하는 데 기여했지만, 평양 내부에 조성된 초고층, 대규모,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에 시선이 쏠리면서 도시와 도시, 도시와 비도시 간의 관계를 등한시한 맹점도 있다. 이처럼 도시의 내적, 영역적 특성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자 비판적 도시연구 학계에서는 “방법론적 도시주의(methodological cityism)”(Angelo and Wachsmuth 2015)라는 성찰적 개념이 제시되었다.

북한 이외 다른 국가의 도시연구는 상대적으로 자료접근이 수월하고 무엇보다 현장답사가 가능한 연구환경임을 상기하면, 북한의 블랙박스를 여는 속도는 북한 밖 도시연구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다. 북한도시연구는 아직 굳게 닫혀 있는 블랙박스들을 여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블랙박스 내부를 파악하는 것이 힘든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블랙박스 내부를 우선 주목한다는 이유만으로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빠졌다면 북한도시연구를 비판한다면 관련 연구자들로서는 비판의 수위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박스가 열릴 때까지 방법론적 도시주의적 성찰의 적용을 연기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북한 도시공간의 재편과 도시화 과정을 파악하려면 방법론적 도시주의적 성찰이 필요하다. 필자가 방법론적 도시주의의 성찰이 북한도시연구에 필요하다고 보는 데는 몇 가지 결정적 장면이 있어서다.

첫째 장면은 김정은 집권 십 년 동안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대외관계의 긴장을 고조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을 만들 명분으로 평양과 몇몇 주요 도시의 개발에 앞장서는 행태가 빚어내는 상호모순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순’이란 단어는 북한에서 전개되는 도시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어쩌면 모순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상반되는 두 행태를 이어주는 설명의 사슬을 연구자가 놓친 것일 수 있다.

둘째 장면은 평양과 주요 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내부는 낙후되고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에서 평양과 몇몇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현대적 주택들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지는 전국적인 건설의 스펙터클을 본 독자는 북한도시도 자본주의 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공간이 전격적으로 변화하면서 오늘날 북한의

도시화 과정을 김정은 정권의 고유한 특성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런데 위성사진서비스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열고 잘 알려진 평양과 몇몇 주요 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 시선을 돌리면,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도시들의 크기는 작고, 각 도시 내부는 최근 건설된 살림집 구역 이외의 도시공간은 낙후되어 있으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중소도시들 간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이 형성된 원인을 파악하려면 개별 도시 단위로 접근하기보다 이들 도시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친 선대를 포함한 최고지도자 혹은 당 차원의 정책적,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장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김일성부터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 정권까지 북한의 도시공간 재편 및 도시화 과정을 “진지전 도시화(positional warfare urbanization)”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진지전(陣地戰)은 군사학 용어이다. “주로 고정된 진지에서 실시하는 전투”를 의미하는 진지전은 “방어 위주의 작전”으로 전개된다(이강언 외 2009, 430).<sup>1/</sup>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에서도 북한은 유사시 대비를 명분으로 폭격에 취약한 대도시로 성장하기를 지양하는 분산된 공간계획과 각 도시들이 외부(특히,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자력갱생”을 북한주민들에게 주문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지역 간 주민이동이 상당한 통제를 받고(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방역체제에서 더욱 제한됨),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거의 부재하며,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와 대립해 대외적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건설

---

1/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진지전과 기동전은 군사학 용어를 따랐고 Antonio Gramsci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참고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그람시의 진지전/기동전도 본래는 군사학으로부터 비롯했다(Egan 2014).



된 새로운 도시공간들에는 적국을 상대하는 격전장의 의미가 부여될 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 십 년의 중반기인 2016년부터 예전에 사용된 자력갱생 구호가 재등장하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필자의 시선에 북한도시들은 마치 식량과 탄약, 무기를 비축하고 적에 맞서는 군사시설인 진지처럼 보였다. 선행연구는 진지로서 북한도시의 여러 관계적, 공간적, 역사적 특성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지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진지전 도시화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진지전 도시화를 개념화한다. 둘째, 진지전 도시화 개념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진지전 도시화와 관련된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된 담론의 특성과 공간적 구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대효과는 관련 연구자들이 북한도시를 보다 관계적으로 접근(도시의 내부-외부 관계, 도시-도시 관계, 도시-비도시 관계 등)하고, 그동안 북한도시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다양한 논리와 전략들(군사적, 지정학적 측면 등)로 분석의 시야를 확장할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인 I 장에 이어 II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논의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학에서 북한도시연구의 의의를 평가하고, 앞으로 연구방향에서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대한 성찰적 접근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적 도시주의적 성찰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북한도시에 대한 영역적 이해에서 벗어나 도시 안팎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돕는 행성적 도시화론과 군사적·지정학적 요인들과 도시공간 간의 관계를 주목한 도시지정학을 검토한다. 끝으로 진지전 도시화의 개념적 특성을 세 가지 측면(1) 분산된 도시 간 구성, 2) 도시 간 교통 인프라의 불균등

한 발전 양상, 3) 진지전 도시화를 정당화하는 담론의 역할)에서 논의한다.

III장에서는 앞 장에서 추상적으로 논의된 진지전 도시화 개념을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여 개념의 유효성을 검증하려 한다. 먼저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선대의 진지전 도시화의 형성배경 및 특성을 살핀다. 다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첫째 측면으로 진지를 연상시키는 분산된 도시 간 구성의 특성과 이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진지’에서의 자력갱생형 지방경제의 움직임을 살핀다. 둘째 측면으로 진지들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공간적 특성이 전반적으로 낙후 상태이면서도 평양을 중심으로 차등화된 발전 양상이 나타남을 도로망을 사례로 들어 확인한다. 셋째 측면으로 진지전 도시화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담론의 역할을 살핀다. 대외관계가 악화된 두 차례 핵실험이 있던 2016년을 기점으로 자력갱생 구호를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대규모 도시건설 사업들이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 틀 짓기가 이뤄지고,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욕망을 전유한 새로운 표현(“도시부럽지 않은”)이 등장한 것을 주목한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한다.

---

## II.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논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 논의

---

## 1. 북한도시연구와 방법론적 도시주의

### 가. 북한학에서 북한도시연구의 의의

북한도시를 장기연구주제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팀은 약 20년 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최완규를 중심으로 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팀이다. 연구책임을 맡았던 최완규는 당시 북한학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의 북한연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보다도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제한성인바, 특히 주제에서 중앙 정치의 과잉과 방법에서 거시적 접근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연구는 체제의 중앙, 즉 평양을 중심으로 한 정치영역의 분석에 머물러 있었고 이를 위한 자료는 북한이 공식 간행물이나 역사문헌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대담론 등에 치중해 있었다. ... 결론적으로 지금 북한연구의 주요한 지향점은 기존의 중앙정치에 집중된 관심을 바꾸고 보다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에 집중하면서 정치 이외의 분야까지 포괄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방법에 착목하는 것이다”(최완규 2004, 10, 밑줄은 인용자 주).

인용문에서 밝히듯이 최완규는 당시 북한학 연구가 중앙정치와 거시적 접근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상황에 비판적이었다. 최완규가 대안적으로 모색한 ‘미시적 기초’는 북한의 지방도시였다. 경남대 연구팀은 청진, 신의주, 혜산을 주목했는데, 개별적으로 각 도시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정치’라는 추상화된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권력체제(당조직), 공장체제(공장당 위원회), 지역체제(인민반) 간의 유기적 관계가 북한 지방도시들을 구성하는 공통된 특성임을 추출하려 한 시도가 학술적으로 돋보였다.

경남대 연구팀 이후에 북한도시를 장기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동국대 북한도시사연구팀이다. 흥미롭게도 동국대 연구팀의 연구책임자였던 고유환은 당시 기준으로 약 십 년 전 최완규(2004)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아래와 같이 드러냈다.

“지금까지의 북한연구는 대체로 국가 중심의 역사, 최고지도자나 당의 역사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특히 기존 북한연구의 공통적 특징은 체제 중심, 최고지도자내지 중앙 정치에만 주목하여 다양한 도시 및 지방 공간이 가지는 고유성과 역동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공간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다”(고유환 2015, 10).

두 연구팀 사이에는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경남대 연구팀의 북한도시 연구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의 북한도시연구는 여전히 불모지였다. 이러한 원인은 경남대 연구팀의 선도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당시 북한학계에 팽배했던 국가 중심, 체제 중심의 연구관성이 여전히 지배적이었고, 한국연구재단 사업처럼 대형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개인 연구자들에게는 상당 인원의 탈북민 인터뷰, 도시분야 전문가 자문, 북한 자료 습득을 위한 북중접경지역 현지조사

등을 위한 비용을 확보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두 연구팀의 연구기간은 10년의 간격이 존재하지만, 그사이에 후속 연구가 채워지지 못하면서 동국대 연구팀도 경남대 연구팀의 문제의식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남대 연구팀이 청진, 신의주, 해산을 주목했다면, 동국대 연구팀은 함흥과 평성을 주목하면서 중앙(평양)에서 벗어난 다양한 도시 및 지방의 공간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경남대 연구팀의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도 나름의 이론적, 방법론적 차별화를 시도했다. 해외학계의 사회주의 도시 논쟁, 해외 사회주의 도시의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사례들을 검토하여 북한도시와 비교하는 비교사회주의 분석을 시도했는데, 해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도시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밝히려는 접근은 ‘김일성-김정일의 도시’라는 특수성에만 함몰되지 않고, 보다 다면적으로 북한도시를 바라보면서 분석의 폭과 깊이를 심화했다. 방법론적 성취로는 북한연구에서의 고질적인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 구글 어스 등의 새로운 방법들을 선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남대 연구팀에서 학제적 연구방법을 강조했지만 실제 연구진은 북한학 전공자 중심이었다면, 동국대 연구팀은 지리학, 건축학, 역사학, 인류학 전공자들을 공동연구원으로 전면 배치하면서 실질적인 학제적 연구방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2021년 3월까지)까지의 북한도시연구에서 살핀 도시들의 시기별 연구 건수를 정리한 박성열 외(2021, 138-139)에 따르면, 1990년대는 4건, 2000년대는 13건에서 2010년대 들어 45건으로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괄목할 증가는 장기연구사업으로 추진했던 경남대 연구팀과 동국대 연구팀이 마중물로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연구비를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통일부 등) 및 민간기관(통일과 나눔 재단 등)의 북한도시연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0년대 초반(경남대 연구팀)과 2010년대 초반(동국대 연구팀)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북한도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도시에 특화된 연구사업이 부재했다.<sup>2/</sup> 다행히도 2021년 송실대평화통일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내부적으로 북한도시연구단을 꾸렸다.<sup>3/</sup> 이처럼 최근까지도 학계에서 장기적인 북한도시연구를 추진할 연구집단이 등장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북한도시연구의 전초기지 역할은 대학에 기반한 학계가 아닌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수행하였다.

최완규(2004, 9)는 “북한의 과거에 대한 문헌연구에 치중한 역사적 접근법은 그것이 결과한 사회과학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기 힘든 약점이 있고, 또한 북한의 현실에 집착하는 이슈 분석 접근법은 엄밀한 의미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정책 페이지의 기능적 역할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최완규가 지적한 ‘정책 페이지의 기능적 역할’은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정부부처가 필요로 하는 북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세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현재도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역할이다. 당시 최완규는 역사적 접근법과 이슈 분석 접근법을 넘어선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과학적 접근”(최완규 엮음 2004, 9)의 역할을 맡을 주체로서 정책 페이지의 기능적 역할을 맡아왔던

2/ 다만 현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지원기간: 2019~2024)에 선정되어 꾸려진 북한혼종사회연구단에서 혼종성(hybridity)의 공간 중 하나로 북한도시를 연구하고 있다.

3/ 송실대 북한도시연구단의 연구성과 평가는 아직 본격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은 연구 초반기라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원에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2010년대 중반 이후 학계에 북한도시 관련 장기연구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일연구원은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를 해왔다.

**표 II-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북한도시 관련 연구목록<sup>4/</sup>

| 저 자     | 제 목   | 발간연도 |
|---------|---|------|
| 홍민      |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 2015 |
| 홍민 외    |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 2016 |
| 홍민      |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 2017 |
| 조정아·최은영 |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br>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 2017 |
| 홍민 외    | 북한 변화 실태 연구:<br>시장화 종합 분석                         | 2018 |
| 정은이 외   |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br>결정요인 분석            | 2019 |
| 홍민 외    |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br>로지스틱스                    | 2019 |
| 황진태·백일순 |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br>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 2021 |
| 정은이·이해정 |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br>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 2022 |
| 홍민 외    |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 2022 |
| 홍민 외    | 북한 주요 도시 경제 인프라 지도                                | 2023 |

출처: 필자 정리.

앞서 최완규(2004)가 제시한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정치’(즉, 권력

4/ 도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홍민 외 2020),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최지영 외 2021), 『북한의 중산층』(정은미 외 2022),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박영자 외 2022) 등의 연구들은 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생활, 생활세계, 중산층 등의 개념들을 살피면서 도시연구의 ‘느슨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체제(당조직) + 공장체제(공장당위원회) + 지역체제(인민반) 모델이 오늘날 북한도시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주민들의 자구적 경제활동 또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서재진 2004)로서 장마당의 활성화가 기존 도시정치, 도시공간의 판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sup>5)</sup> 이와 같은 시장화의 심화는 통일연구원의 연구주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북한도시 관련 연구 목록(<표 II-1>)에 수록된 보고서 제목에 시장화가 다수 포함된 것은 시장화와 도시화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통일연구원에서 도시를 주목한 첫 번째 연구서인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홍민 2015, 3)는 북한의 시장화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현상에 해당한다라는 사회-공간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화가 도시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연관하여 시장과 정치권력이 결합한 새로운 도시정치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도시 안의 사회계층이 공간적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세 도시(평양, 순천, 청진)를 통해 밝히고자 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도시공간과 시장화 간의 사회-공간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른 부문(기업소, 대학 등)과 연계하거나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발전해왔다(홍민 외 2016; 홍민 외 2018; 홍민 외 2022; 홍민 외 2023).

위 연구목록을 통해서 통일연구원의 북한도시 연구가 활성화된

---

5) 당시 경남대 연구팀도 도시에서의 “농민시장” 증가를 주목했고, 시장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구갑우·최봉대 2004). 1960년대 출현한 농민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기보다 농촌에서 나오는 간단한 잉여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도시 외곽에서 생겼다. 1990년대 경제위기에 대응한 주민들의 생존과 맞물려 불법 시장으로 출현한 장마당은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시장으로 인정받고 주민들이 밀집된 도심에 입지하면서 북한도시의 주요 공간이 된다(홍민 외 2022, 77-83).

출발점에서 홍민 박사가 핵심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통일연구원에 합류하기 전에 동국대 북한도시사연구팀에 있었다는 연구자 개인의 이력과 시기적으로 북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이 접목됨으로써 대형 연구사업이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운 전국적 규모의 지역을 살피는 연구를 다년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1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학 연구에서도 도시공간, 일상세계, 미시적 차원의 연구 필요성에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통일연구원의 다른 연구자들도 북한주민의 경험과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일상생활을 주목한 연구(조정아·최은영 2017), 도시경제의 핵심 축인 기업소의 경제활동과 도시공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정은이 외 2019; 정은이·이해정 2022), 도시정치생태학(urban political ecology)의 측면에서 북한도시와 환경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황진태·백일순 2021)와 같은 다양한 소재, 이론적 시각에서 북한도시연구가 시도되었다.

표 II-2 역대 북한도시포럼 개최 현황

| 회 차        | 주 제                              | 일 시         | 발표논문수 |
|------------|----------------------------------|-------------|-------|
| 제1회 북한도시포럼 | 북한 도시의 재발견: 스토리텔링과 시각화, 도시성을 찾아서 | 2018.11.29. | 3편    |
| 제2회 북한도시포럼 | 평양, 도시공간과 모빌리티                   | 2019.8.28.  | 5편    |
| 제3회 북한도시포럼 | 평양, 숨겨진 차원을 찾아서                  | 2019.12.5.  | 6편    |
| 제4회 북한도시포럼 | 이상블라주 원산, 수행적 도시의 리얼리티           | 2020.11.26. | 9편    |
| 제5회 북한도시포럼 | 코로나 시대 북한도시: 비상방역레짐과 분단의 지리학     | 2021.12.1.  | 7편    |
| 제6회 북한도시포럼 |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 변화     | 2022.12.14. | 6편    |

출처: 필자 정리.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북한도시에 관한 새로운 주제와 방법, 이론을 선도적으로 소개하는 통일연구원 북한도시포럼을 주목할 수 있다. 2018년 첫 번째 포럼을 시작으로 제2회, 제3회에서는 그간 북한도시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평양을 특집소재로 했지만, 다양한 시각과 주제(평양의 공장기업소 분포, 한강과 대동강 비교,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up>6/</sup>로서 평양, 평양의 식당들, 평양 산책자의 시선과 도시감각 등)의 발표로 기존 평양 연구범주의 지평을 확장하는 시도를 하였다. 제4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양중심의 도시연구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문제의식을 갖고 원산을 조명하였으며, 제5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도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신선한 방법론적, 이론적 시도들(노동신문 보도사진을 활용한 팬데믹 전후 도시활동 비교,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활용한 팬데믹 시기 북한의 경제지리, 위성사진을 활용한 북한 물류와 장마당 현황, 코로나19에 대한 신유물론적 해석 등)을 보여줬다.<sup>7/</sup> 제6회는 김정은 집권 10년에 맞춰 북한도시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연구(북한의 도시건설 담론 10년 분석, 군사화 경관으로 북한도시와 핵·미사일의 공간적 스펙터클 등)를 선보였다.<sup>8/</sup>

북한도시포럼은 여러 전공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기능을 유지하면서 매년 한국사회가 관심 있을 주제들을 기민하게 발굴하고, 집합연구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측면과 학술적 측

---

6/ 헤테로토피아는 철학자 미셸 푸코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와 달리 현실에 존재하는 '현실화된 유토피아'의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장소(도서관, 묘지, 사창가 등)를 헤테로토피아로 접근한다(미셸 푸코 2014).

7/ 통일연구원 유튜브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diJ-h5aNm5A>)에서 제5회 포럼의 발표영상을 볼 수 있다.

8/ 통일연구원 유튜브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nQvf86aGN3I>)에서 제6회 포럼의 발표영상을 볼 수 있다.

면의 성과를 동시에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다년간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일회적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학술논문 및 기타 출간물 형태로 나오면서 학계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안진희·심지수 2023; 박소혜 2023; 황진태 2019, 2020b).

## 나. 방법론적 도시주의 관점에서 북한도시연구의 성찰적 접근

북한도시연구의 시기별 추이를 살핀 박성열 외(2021, 138-139)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62건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시도된 도시는 평양(13건)이고, 뒤이어 개성(6건)과 함흥(6건), 신의주(4건)와 혜산(4건), 평성(3건)과 청진(3건) 순이다. 이처럼 평양을 정점으로 한 몇몇 특정 도시에 연구가 집중되는 편향성은 자료접근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대외선전 목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외부에서도 자료접근이 용이하며, 경제특구가 조성된 개성은 남북 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한국 측 인사들이 방문할 기회가 많아 지역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북중 접경도시 출신 탈북민들로부터 확보한 인터뷰 자료에서 해당 도시의 정보를 얻었으며, 한국전쟁 직후 도시재건을 도왔던 국가에서는 재건된 북한도시의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경로를 통해 결과적으로 특정 도시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최소한 도 소재지가 있는 9개 도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10개 도시(수도 평양 포함) 중에서 4개 도시(사리원(황해북도), 해주(황해남도), 원산(강원도), 강계(자강도))가 빠져 있다.

9/ 국책연구원의 특성상 정책적 사안에 대한 협업에 비하여 학술적 사안에 대한 연구원 내부의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포럼 기획 및 발표와 관련하여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이 상호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점도 포럼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최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 시도한 『북한 주요 도시 경제 인 프라 지도』(홍민 외 2023)는 김정은 집권 십 년 동안 평양과 도소재 지 9개 도시에서 신규 건설, 공장기업소, 대학, 사회간접자본 부문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연구에서 평양과 도소재 지 9개 도시를 선정한 의도도 연구지역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sup>10/</sup>

이처럼 연구지역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황진태 2023a)처럼 내부를 알 수 없는 북한도시들을 하나하나 여는 작업은 앞으로도 북한도시연구의 주요한 목표이다. 이미 연구가 이뤄진 도시 이더라도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도시의 사례연구 수가 10건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블랙박스가 충분히 열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스 내부의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연구자는 블랙박스 열기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박스 열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하도록 그동안 북한‘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전제에 대한 성찰을 제기하려 한다. 즉,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한 박스처럼 도시를 영역적 용기로 접근하는 것이 북한도시를 분석하는 데 적절한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서구 도시연구에서 중요 화두인 “방법론적 도시주의(methodological cityism)”(Angelo and Wachsmuth 2015)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도시주의는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시의 내적 특성이나 도시 내부의 과정을 도시 외부의 요인이나 관계보다 선택적으로 우선하면서 “도시와 도시”, “도시와 비도시(non-city)” 간의 영역적 분리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가리킨다. 여기서 도시의 내적 특성이란 “평양”, “원산”과 같은 지명이 가리키는 지도상의 뚜렷한

---

10/ 필자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기에 내부 논의를 알고 있다.

행정적 경계 내에 존재하는 높은 인구규모, 집중적인 토지이용, 2·3차 산업이 밀집되어 비도시/촌락과는 대조되는 도시의 전형적 특성들을 가리킨다. 즉, 방법론적 도시주의 개념은 기존 연구자들이 분석하려는 연구대상인 도시의 내적, 영역적 특성들을 과도하게 주목하면서 실제 도시공간의 형성에서 도시 밖에 있는 다른 도시/비도시/촌락과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를 놓치는 것을 비판하고자 제시되었다.

북한도시연구에서 확인되는 방법론적 도시주의는 서구 학계에서 방법론적 도시주의가 제기된 배경과는 다소 다른 원인이 있다. 서구 연구자들은 도시연구에서 해당 도시의 현지조사가 가능하지만, 북한도시는 연구자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서구 도시들은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도시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갖춰졌음에도 인식론적으로 연구자들이 도시 내부의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포획되었다면, 북한도시 연구자들은 앞서 기존 북한도시연구 현황에서 보았듯이(박성열 외 2021), 연구하려는 도시를 방문하지 못하면서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설령 인식론적으로 도시 안팎의 요인들을 고려했을지라도 방법론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 도시 간 물류흐름을 모빌리티(mobility) 개념으로 포착하려 한 홍민(2015)과 북한의 일부 농장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동을 시도한 것을 두고 도시와 농촌의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는 “연접공간(連接空間)”이 형성된 것으로 징후적 진단을 한 박희진(2020)의 연구는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선구적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자료 부족으로 저자들의 이론적, 인식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이 확인된다.

이처럼 자료취득, 현지답사의 어려움으로 방법론적 도시주의가 나

타나게 된 측면을 먼저 서술(혹은 변호)했지만, 방법론적 도시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시 안팎의 관계성,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기존 연구자들이 갖고 있었는지는 분별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즉,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른 북한의 도시공간 변화가 북한매체를 통해 외부에 전달되는 방식이 연구자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에 잇따라 조성된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준공), 려명거리(2017년 준공), 송화거리(2022년 준공), 화성지구 1단계(2023년 준공), 서포지구(2023년 착공)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도시공간이 급격하게 바뀌고, 지방에서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코로나19로 준공 연기), 삼자연시(2021년 재개발 공사 완료) 등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북한 외부에 있는 연구자의 시선에서는 최고지도자가 만드는 것으로 묘사되는 다양한 건설의 스펙터클(<그림 II-1>)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II-1** 려명거리 모형건축물 앞에서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의 모습



출처: 노동신문 2016.3.18./뉴스 1.



임수진(2023)은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구체적 방식이 도시개발에 방점을 두었음을 주목한다. 김정일 정권에서 도시개발이 최고지도자 우상화(영생탑, 주체사상탑 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인민에게 필요한 살림집, 문화·체육시설 건설을 보다 강조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임수진(2023)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박소혜(2023)도 사회주의문명국,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통치담론이 건설담론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우표발행국인 조선우표사가 발행한 2022년 준공된 송화거리의 전경을 담은 우표(〈그림 II-2〉)에는 8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전면에 부각해서 도시공간 변화의 압도적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동시에<sup>11/</sup>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 “인민사랑”과 같은 텍스트를 병치(竝置)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필요(“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에 부응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정권의 통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11/ 실제 우표로 사용될 절취선의 범위를 80층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맞춰 제작한 것도 이 건물이 송화거리를 대표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을 내포한다. 권위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표에 특정 이데올로기 및 국가정책의 방향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우표 사용을 예외적인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황진태 2018b).

그림 11-2 북한이 송화거리를 주제로 발행한 우표



출처: 뉴스 1 2022.7.15. / 뉴스 1.

그런데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 간의 도시건설 방향의 차이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임수진 2023; 박소혜 2023)은 대체로 도시건설의 추진배경을 북한 정권과 주민 간의 관계라는 내부 통치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당국이 도시건설을 추진하게 된 도시 안팎의 다양한 배경, 동기, 요인들을 충분히 주목하지는 못했다.<sup>12/</sup>

흥미롭게도 해외 유력언론은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평양의 도시공간 변화가 미국 뉴욕의 고층건물이 밀집된 중심부인 맨해튼(Manhattan)에 비견된다며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The Guardian 2015.7.8.; The Washington Post 2016.5.14.). 이 기사들에서도 대규모 도시개발의 배경이 통치 전략과 관련되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평해튼 단어가 함축하듯이 물

12/ 박소혜는 대북제재와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대외관계 약화의 맥락과 건설 부문에서의 자력갱생 구호 간의 상관관계를 간략히 언급했지만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다(박소혜 2023, 182, 187).

리적 경관 변화를 보다 주목하면서 이를 역대 정권과 차별화된 김정은 정권의 특성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변화된 공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구매력 높은 “상위 1%(one-percenters)”(The Washington Post 2016.5.14.)에 해당하는 새로운 계층이 탄생하게 된 저류(低流)에 시장화가 있다고 본다.

방법론적 도시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신조어는 북한도시를 보여주는 퍼즐 한 조각일 뿐이며, 그 조각이 어떻게 선대부터 지속되어 온 공간적 경로의존성이나 현재 북한이 직면한 다른 현안들과 연관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즉, 평해튼이라는 단어는 서구 자본주의 도시인 뉴욕 맨해튼과 평양의 도시공간과의 형태적 유사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도리어 북한도시의 다양한 실제들(realities)을 보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sup>13/</sup>

다음으로 살펴볼 지점은 김정은 정권이 “자력갱생” 구호로 상징되는 각 지방도시들이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각 도시의 “자연지리적”, “경제지리적”<sup>14/</sup> 특성들을 활용하여 자체 생존해야 한다는 방향

13/ 본문의 평해튼에 대한 연구자의 비판적 접근은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국한된 것이 이 단어의 다른 학술적 의의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평해튼이 전제하는 형태적 유사성은 기존 비교사회주의 연구에서 이념적 유사성에 간혀 있던 우리 연구자들의 비교주의적 시각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황진태 2022, 31). 2018년 5월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하여 실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보았는데 그러한 북한 정치엘리트의 서구 자본주의 도시의 경험은 앞으로 북한도시의 개발방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학·지리학적 상상력을 촉발한다(황진태 2022, 31). 건축학을 전공한 안진희·심지수(2023)는 북한 당국이 맨해튼을 평양이 추구하는 이상향으로 가정한 비교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14/ “자연지리”와 “경제지리”라는 단어는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북한문헌에서 사용되었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도 다음 기사들처럼 빈번히 사용된다. “산을 낀 곳에 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 유리성과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노동신문 2023.1.26.).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게 기술고급중학교들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올해에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오고...”(노동신문 2022.2.24.).

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매체 보도를 접한 연구자들은 북한도시를 도시 안팎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각 도시의 내부적 특성(즉, 자연·경제지리적 요인)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필자가 제기한 방법론적 도시주의 문제의식에서 오해해선 안 될 부분은 평양의 도시개발에 “김정은을 위치시켜 그가 이 거리와 건물들의 주인공임을 도드라지게 보여”(홍민 2017, 81)지는 측면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시개발이 온전히 평양에서 살고 있는 지도자 김정은 혹은 평양 내부의 인력, 자원만으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복합적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2023년 착공한 4,100세대 규모의 평양 서포지구 건설을 위한 인력은 지방에서 약 10만 명의 청년이 탄원 형태로 징발되었고(노동신문 2023.2.26.),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사업은 그동안 지방에 매장된 각종 건설자재들(목재, 철, 시멘트 등)의 공급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sup>15/</sup> 이처럼 도시 외부로부터 자원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도시들은 “도시거름 보내기”라는 이름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도시 내부에서 발생한 오물들을 도시 밖으로 내보내며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도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도시, 도시와 비도시 간의 관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진태 2023b, 117-118).

15/ 평양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증산의 열기”로 들끓고(노동신문 2021.3.30b.), 목재를 보장하려고 낭림, 강계, 희천 등에서는 “통나무생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다”(노동신문 2021.3.30a.), 이렇게 확보된 자재들을 평양으로 “제때에 떠나보내”도록 지방의 철도역들은 “집신기와 차갈이, 화차편성을 짜고들어 열차머 무름시간을 줄”이려는 일사불란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되었다(노동신문 2021.3.30c.).

즉, 북한도시연구에서 방법론적 도시주의의 맹점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도시에서 전개되는 도시개발이나 전반적인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시 안팎에 있는 다양한 인간·비인간의 물질 흐름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조절(regulation)하는 지를 주목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도시 안팎의 물질적 흐름과 연관되어 국가 스케일에서 주로 순환하는 담론, 논리, 전략이 어떻게 도시공간의 재편과정과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야 한다.

서두에서 북한학이 도시를 주목하게 된 배경으로 기존 연구가 체제 및 정치엘리트에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도시 및 지역의 공간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최완규 2004; 고유환 2015). 지리적 스케일(geographical scale)의 측면에서 보면, 분석의 시야를 국가 스케일에서 도시 및 지역 스케일로 보다 내려가 살펴보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 및 지역 스케일에 주목하는 것을 곧 국가 스케일에서 움직이는 행위자들을 도시 연구에서 제외하거나 국가 스케일이 국가 아래의 도시 및 지역 스케일과는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관계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국가 스케일이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를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도시공간의 생산과정에서 상이한 스케일상에 위치한 행위자들은 국가 스케일상에 위치한 행위자들과 형성하는 구체적인 관계성을 발굴하는 데 초점”(황진태 2022, 27)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접근은 북한연구의 핵심주제인 국가 스케일에서 다뤄진 정치엘리트 및 체제연구에도 새로운 설명, 통찰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상 1절에서는 북한도시연구의 발전과 한계를 검토했다. 특히, 앞으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론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다음 2절에서는 개별 도시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변화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보다 시각을 확대하여 어떻게 다른 도시 및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도시/도시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도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북한 당국의 대외관계 속에서 중시되어온 논리와 전략들이 어떻게 현재의 도시화와 연관되었는지를 밝히고자 진지전 도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이 개념을 고안하기 위하여 우선 도시이론 중에서 행성적 도시화론과 도시지정학 논의의 통찰을 빌려온다.

---

## 2. 진지전 도시화의 개념적 특성

앞서 1장에서 진지전 도시화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절에서는 자본주의 도시들과는 다른 양상의 도시화 과정을 내포하는 북한의 진지전 도시화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평해튼이 위치한 평양이라는 특정 도시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와 지역들은 평양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성을 맺고 있으며, 비군사적 공간으로 간주해 온 도시공간이 어떻게 군사적 논리가 투영되는지 등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유용한 도시이론인 행성적 도시화론(가향)과 도시지정학(나향)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향에서는 김정은의 진지전 도시화 특성을 구체화한다.

## 가. 행성적 도시화론<sup>16)</sup>

진지전 도시화를 개념화하기 위해 행성적 도시화론(planetary urbanization thesis)을 참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도시와 도시, 도시와 비도시 간의 관계적, 총체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도시, 도시-비도시 간의 관계적 이해에서 인프라(교통, 에너지 등)의 연결성을 주목하는데, 연결성의 양상에 따라 어떤 곳은 다른 곳보다 더 발전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불균등발전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일국가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륙적, 행성적 차원에서 도시를 이해하는 접근은 남북한, 동북아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되는 이점들을 중심으로 행성적 도시화론을 살펴본다.

앞서 다른 방법론적 도시주의는 보다 광범위하게는 행성적 도시화론에 속한다. 기존 도시연구가 도시를 행정적 경계 내부의 요인들(높은 인구밀도, 집중적 토지이용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와 비도시 간의 영역적 분리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방법론적 도시주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면, 행성적 도시화는 그러한 방법론적 도시주의에서 벗어나고자 도시에 대한 대안적 인식을 제공한다.

행성적 도시화 테제에서 비도시의 공간은 단순히 도시와 인접한 촌락이나 자연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2007년 UN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시의 시대(Urban Age)를 선언했다.

16) 본 연구자는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비롯하여 여러 지면에서 행성적 도시화에 대한 기본 정의, 쟁점을 소개한 바 있다(황진태 2016, 2018a, 2020b; Hwang 2021). 따라서 다른 지면에서 소개한 행성적 도시화의 핵심 내용(특히, 집중적 도시화와 팽창적 도시화의 일반적 소개)은 본 보고서에서도 큰 차이 없이 기술되었다. 다만 본 보고서의 의도에 맞게 새로운 관점과 해석(도시 지정학 논의와 연결하는 지점 등)을 추가했음을 밝힌다.

폭발적인 인구증가 속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류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연에 매장된 막대한 화석에너지 채굴 및 원거리 운송을 돕기 위해 비도시 지역인 지구 표면은 각종 인프라(도로, 송전선, 광케이블망, 공항, 항만 등)로 덮여가고 있다. 실로 21세기의 도시화는 행성적이라는 수식어와 밀접해지는 것이다.<sup>17/</sup>

구체적 예시로 우리와 가까운 중국의 도시화에 필요한 자원은 태평양 건너 남미에서의 채굴산업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대륙을 넘어 그야말로 행성적 차원에서 물질적 이동이 수반된다.<sup>18/</sup> 다른 예시로 아마존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남미 아마존은 태고의 자연, 지구의 허파와 같이 순수한 자연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9/</sup> 반면에 <그림 II-3>은 순수한 자연이 아닌 도시화가 진행되는 핵심 공간으로서 아마존을 접근한다.

행성적 도시화 논의를 주도하는 도시사회학자 Neil Brenner의 연구팀에서 제작한 <아마존에서의 도시화>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제작한 의도는 아마존에 매장된 석유,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광케이블망, 도로망, 선박경로, 아마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및 도시공간의 물리적 확산범위와 같은 다양한 수치 및 공간정보를 시각화·지도화하여 순수한 자연으로서 아마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대륙적·행성적 규모로 순환하는 물질 흐름 속에서 도시화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17/ 인류가 지구시스템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지면서 새로운 지질시대로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가 제안되었고, 최근 해외학계에서는 인류세의 도시적 측면을 강조한 도시세(Urbicene) 용어도 등장했다(도시인문학용어사전, 2023.9.10. 접속).

18/ Arboleda, Martin,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0(1), 96-112(황진태 2018a, 283 재인용).

19/ 특히, 2009~2010년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5부작 <아마존의 눈물>은 한국 사회에 아마존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다.



그림 II-3 행성적 도시화의 시각에서 아마존의 지도화



출처: Estrada 2014.5.11.

이상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핀 것을 바탕으로 행성적 도시화 개념을 정리해 보자. 행성적 도시화는 집중적 도시화(concentrated urbanization)와 팽창적 도시화(extended urbanization)로 구성된다. “집중적 도시화는 전형적인 도시(city)의 형성 및 발전 과정(특정 입지에 인구, 인프라, 투자의 집중)을 가리킨다면, 팽창적 도시화는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노동, 상품, 문화형태, 자연자원 등의 대규모 순환과 도로망, 전력망,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의 연결성을 주목한다.”<sup>20/</sup>

다시 말해, 집중적 도시화가 기존 도시연구에서 주목하는 전형적인 도시(city)로 이해된다면, 행성적 도시화 테제는 집중적 도시화뿐만 아니라 도시가 형성, 발전되는 과정에서 도시 밖의 팽창적 도시화가 어떻게 집중적 도시화와 변증법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볼 것을 강조한다. <그림 II-3>은 아마존 내부의 도시화(즉, 집중적 도시화)

<sup>20/</sup> Brenner, 2013, *Public Culture* 25(1), 85-114(황진태 2020b, 335 재인용)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와 아마존의 자원매장지들을 연결하는 도시의 안팎, 아마존의 안팎, 남미의 안팎에 펼쳐진 여러 인프라를 가리키는 선들을 지도 위에 그려 놓음으로써 팽창적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림 II-4**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와 주변국 야경



출처: Earthdata 202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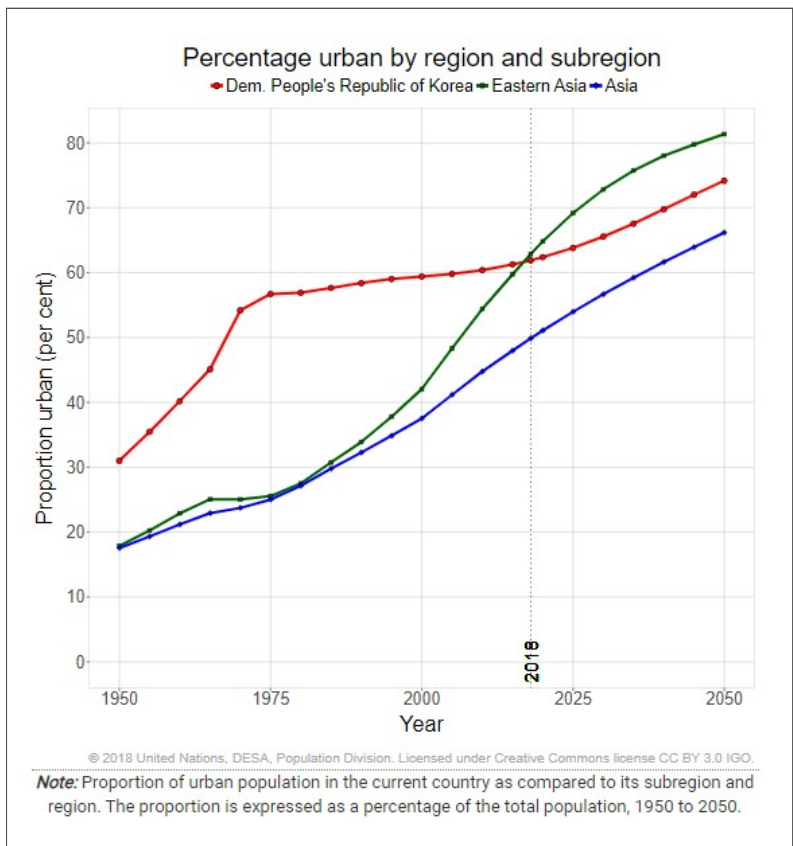
그렇다면 행성적 도시화의 시각은 북한도시를 분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 도시연구에서 야간 조도는 도시화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sup>21/</sup> <그림 II-4>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야간 불빛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이다. 행성적 도시화에서 언급한 집중적 도시화가 불빛의 밀도가 높은 지역인 대도시를 가리킨다면, 팽창적 도시화는 이러한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물망처럼 보이는 여러 인프라를 말한다.

그런데 위성사진에서 평양은 흐릿하게 빛나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도시화의 기준으로 야간 불빛만 본다면 북한의 도시화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촌락의 거주 인구를 통해 도시화율을 측정한 <그림 II-5>를 참고하

<sup>21/</sup> Pandey et al.,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arth Observation and Geoinformation* 23, 49-61(황진태 2020a, 128 재인용)

면, 북한의 도시화(그래프의 붉은 선)는 동아시아 지역 평균(그래프의 녹색 선)에 비해선 낮지만, 아시아 평균(그래프의 파란 선)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2050년 북한의 도시화 예측치는 약 75%에 이른다는 점에서 북한을 농경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II-5** 1950~2050년까지 북한·동아시아·아시아의 도시화율 추세 및 예측



출처: U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n.d.

행성적 도시화 측면에서 북한의 야경이 흥미로운 지점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 일본에서 유사한 야간 불

빛 패턴이 나타나지만, 북한의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어둡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각 도시들이 처한 국지적 원인 때문에 어둡기보다는 한반도에서 작동하는 지정학-지경학적 긴장관계라는 ‘도시 밖’의 변수가 북한의 도시공간에 미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황진태 2020a). 가령, 장기화된 대북제재 하에서 동맹국 지원으로 건설된 노후화한 화력·수력발전소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와 더불어 미미한 불빛이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빛난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의 정책실행이 보편적으로 전역에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집중되는 공간선택성(spatial selectivity)(Park 2005)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북한도시의 팽창적 도시화 측면을 분석하고자 도로 인프라를 살피는데, 대체로 도시 간 도로의 연결성은 떨어지지만,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평양 중심적인 공간선택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성적 도시화는 현상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려는 정책 논의에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행성적 도시화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도시화 과정이 비도시 지역에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은 중국의 행성적 도시화를 위한 비도시 지역으로 기능했다. 북한산(産) 석탄의 대중국 수출이 공식 중단된 2010년대 대북제재 시행 이전까지 <그림 II-4>의 왼편에 해당하는 산둥반도를 포함한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의 불빛을 밝히는 데 북한이 한때 중국의 무연탄 수입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 간의 팽창적 도시화가 전개되었던 것이다(황진태 2020a, 138-14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는 지정학-지경학적 상황으로 인하여 석탄을 매개로 한 중국-북한 간의 팽창적 도시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는 어두컴컴한 북한의 야경을 주변국 수준으로 밝게 만드는 것을 발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국가안보실 2023, 92-94)에서는 지금보다 밝아지더라도 주변국보다 ‘덜’ 밝은 야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한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대안 모색에서도 행성적 도시화 논의의 사유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도시화를 전망하는 IV장에서 재론한다.

기존의 행성적 도시화 연구는 주로 상품화, 금융화와 같은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와 도시화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지정학적 측면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최근 Galindez(2023)의 연구는 미국 자치령인 괌(Guam)을 사례로 미중 간 지정학적 대치 속에서 미군기지를 배치하는 지정학적 의도가 어떻게 괌의 도시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는 시도를 했다. 북한의 도시화 과정이 지정학-지경학적 의도, 논리, 전략과 연관되는 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나향에서는 도시지정학 논의를 검토한다.

## 나. 도시지정학

도시지정학은 주로 글로벌 및 국가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해 온 안보의 논리가 어떻게 도시공간을 통해서도 작동하는지를 주목하는 접근이다. 글로벌 및 국가 스케일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대외관계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북한 당국의 호전적 행태를 목격하지만, 도시 스케일에서 바라보면,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을 만들 목적으로 도시개발에 앞장서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상호모순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이한 논리들의 ‘물과 기름’ 같은 공존은 도시지정학의 통찰을 통해 북한의 도시개발/도시화 과정으로부터 지정학-지경학적 의도, 논리, 전략을 끄집어냄으로써 좀 더 흐트러질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내고 냉전 시기 미국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Henry Kissinger는 지정학을 “강대국의 파워게임”(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164)으로 정의했다. 그의 발언 이전에 소위 고전 지정학은 열강들의 패권경쟁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지리학과 교수이자 정치인이었던 Halford Mackinder가 제안한 심장부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인 “심장부(heartland)”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이 지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독일의 지리학자이자 나치에 부역한 것으로 알려진 Karl Haushofer는 Friedrich Ratzel의 “생활공간(Lebensraum)” 개념을 전유하여 생활공간 회복을 명분으로 독일의 유럽침공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제공했다(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167-16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전지정학의 부활은 키신저가 주요했다.

2022년 통일연구원은 미중경쟁으로 촉발된 동북아 군비경쟁(장철운 외 2022), 미중 전략경쟁에 직면한 한국의 복합대응전략(김갑식 외 2022), 미중 경쟁구도에서 북한의 대응전략(김진하 외 2022)을 주목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각 연구의 방점은 다르지만 미중경쟁이라는 두 강대국의 관계를 독립변수로 규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키신저가 정의한 ‘강대국들의 파워게임’ 혹은 강대국들이 차지하려 하는 ‘심장부’, ‘생활공간’이 어떻게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정학-지경학적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본 분석단위를 국가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은 근대적인 외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제후들에게 영토적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했다. 즉, 근대국가는 영토를 바탕으로 국경 안과 밖이 명확히 구분되며 영토 내부의 배타적 통치를

보장하고, 영토 바깥의 국가들과는 수평적 관계에 입각한 국제관계가 형성된 것이다(박배균 2017, 294; Agnew 1994). 이러한 지정학-지경학 연구에 내재된 국가 중심적 사고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지경학에서도 확인된다(Hwang 2016).

앞서 소개한 통일연구원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각 국가의 전략적 판단, 행위를 주목한 것은 현실정치(Realpolitik) 상에서 국가의 역량(외교, 군사, 무역 등의 의사결정)이 다른 행위자들(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에 비하여 현저한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국가 분석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도시’지정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국가 중심적 지정학 논의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도시 스케일에서의 지정학적 움직임과 특정 도시의 고유한 공간적 특성이 국가/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도시지정학에서 도시는 국가의 군사행위나 테러조직의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수동적 배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도시지정학의 대표 연구자 중 한 명인 Stephen Graham(2004, 166)에 따르면, “도시에 밀집된 건물, 산업, 상징적 의미들 자체가 전쟁과 테러의 명확한 공격대상이 된다”(황진태 2023c, 220)는 점에서 도시의 공간적 특성이 도시 밖의 지정학적 움직임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폭격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이전까지 유럽의 전쟁 방식은 전방에는 군인과 귀족, 후방에는 민간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있었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전후방 개념은 사라지고 전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총력전(total war)으로 변하였다. 총력전에서 실제 전투가 발생하는 전장만큼이나 그 나라의 산업역량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공중폭격은 “전략폭격(strategic bombing)”의 이름으로 도시에 입지한 산업시설이 주요 폭격대상이 되었다

(Hewitt 1983, 260-261; Collier and Lakoff 2008, 10).<sup>22/</sup>

역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한 미국은 전후(戰後) 미국 본토가 외부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sup>23/</sup> 1951년 미국 민방위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미국 국가안전보장지원국(NSRB: National Security Resources Board)이 1950년에 발표한 미국 민방위(United States Civil Defense) 보고서(US NSRB 1950)에는 <그림 II-6>과 같이 미국 도시가 핵무기 공격(약 600m 상공에서 핵폭발과 수중에서 핵폭발을 가정)을 받았을 때 피해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전후 미국의 교외화(郊外化) 현상은 교통의 발달(도심부와 주변부를 연결하는 도로 및 대중교통 발달)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이 쾌적한 교외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거주 교외화와 도시의 일부 업무 기능까지 옮겨지는 고용 교외화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백인들이 교외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인종적 특성도 나타난다. 그런데 Matthew Farish(2003)의 연구에 따르면, 전후 미국사회는 적국의 핵공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했다.<sup>24/</sup> 그는 당시 도시계획, 대중문화, 언론에서 미국 대도시들이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담론이 팽배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한 매체를

---

22/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도시를 폭격대상으로 삼은 또 다른 목적은 화재, 화염을 발생시키는 인화성 물질이 들어간 소이탄을 인구가 밀집되고 인화성 물질이 많은 도시에 터뜨리는 게 효과적이었고, 폭격의 정확도가 낮았던 당시로서는 오래된 도시이 폭탄투하를 위한 일종의 조준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Hewitt 1983,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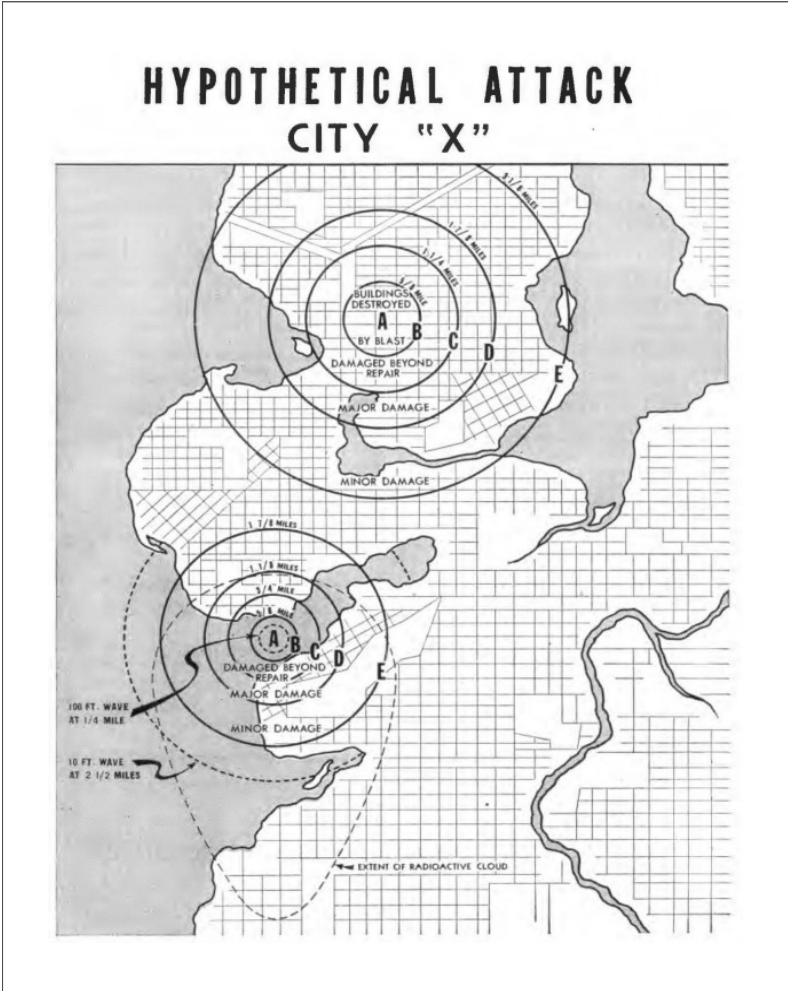
23/ 본 보고서는 핵공격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지만, 또 다른 도시지정학의 사례로 미국 방산업체가 설립한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를 비롯한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이 반전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운동이 발생했던 1960년대 미국의 도시문제(슬럼, 가난, 시위 등)를 “국가안보위기”로 규정하고 도시계획 분야로 진출한 예도 있다(Light 2002).

24/ 핵공포의 형성에는 나가사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와 함께 1949년 8월 소련의 첫 핵폭탄 실험도 기여했다(Farish 2003, 131).



접한 시민들이 도심보다 교외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교외화가 발생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림 11-6** 가상의 핵공격을 받은 미국의 도시 X



출처: US NSRB(1950: 118<sup>25/</sup>).

25/ 이 지도를 학술지에 소개한 Collier and Lakoff(2008)는 미국 민방위 보고서에서 지도가 수록된 쪽수를 119쪽으로 표기했는데 118쪽이 정확하다.

미국 민방위 보고서에서 폭격에 대한 대비는 전략폭격에 관한 미 공군의 지침을 참고했다. 즉, 가장 효과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목표로 폭격대상을 설정하려는 주체가 “합리적 적(rational enemy)”이라면 “총인구, 인구밀도, 중요산업의 입지, 주요 군사시설의 입지, 시정부의 위치”<sup>26/</sup>를 고려했을 것으로 가정했다. 이러한 도시공간에서 잠재적 폭격 및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대비는 한국의 도시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II-7** 수도권 의 한 도시에 위치한 정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지도를 필자가 일부 수정(왼쪽), Google Earth(오른쪽).

가령, 서울 수도권의 한 도시에 입지한 정수장을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에서는 이곳이 정수장이라는 사실<sup>27/</sup>은 밝히지 않고 해당 정수장을 숲으로 편집하여 보이지 않도록

<sup>26/</sup> US NSRB, 1950. United States Civil Defense, National Security Resources Board, [https://www.governmentattic.org/21docs/USCivilDefense\\_NS RB\\_Doc,128\\_1950.pdf](https://www.governmentattic.org/21docs/USCivilDefense_NS RB_Doc,128_1950.pdf) (검색일: 2023.3.20.), 8(Collier and Lakoff 2008, 17, 20 재인용).

<sup>27/</sup> <그림 II-7>의 왼쪽 사진에서 “지명삭제” 문구는 원본 사진에는 이곳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명(원지명이 정수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느 지역인지를 알 수 있음)이 들어가 있어서 지명을 보이지 않게 하고자 연구자가 추가했다.

록 가공했다(〈그림 II-7〉의 왼쪽 사진). 이는 전시에 적으로부터 폭격 및 테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해외 위성사진 제공 서비스에서는 같은 위치의 정수장 시설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을 가리도록 조치한 우리 정부의 군사적·지정학적 고려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본토가 적의 공격을 받지 않은 미국에서 가상 적국의 핵공격에 대비한 도시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북한과 대치한 한국의 도시에서 군사적·지정학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사실<sup>28/</sup>은 북한도시에 대해서도 군사적·지정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할 만하다.

28/ 도시지정학의 시각에서 한국의 민방위와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고조되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면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김정은 시기에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핵 민방위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박휘락 2014; 조기형 2017). 이들 연구에서도 핵무기의 주요 목표가 되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이 일부 언급되지만 앞으로 도시지정학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II-8** 북한이 정찰위성 관련 시험으로 촬영했다며 공개한 수도권 일대 사진



출처: 뉴스 1 2022.12.20.

앞서 <그림 II-7>과 같이 대도시에서 핵공격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든 미국은 일본을 핵공격한 이후 서둘러 핵공격으로부터 자국 대비책을 고안하는 역설을 확인했다. <그림 II-8>은 2022년 12월 북한이 군 정찰위성 발사실험의 와중에 서울과 인천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다. 북한 당국이 <그림 II-8>을 공개한 것은 만약 북한이 고해상도 촬영장비가 장착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서울과 인천에서 공격지점을 선정하는 데 정찰위성 촬영기술이 활용될 것임을 외부세계에 경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진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3월, 북한이 고도 800m 상공에서 모의 전술 핵탄두의 공중폭파 훈련을 감행한 것은 한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핵폭탄 폭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8>도 대도시 대상의 공중 핵폭발이 600m 상공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모의 핵탄두 폭파 실험이 한국의 대

도시를 상징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자국이 상대국을 공격한 경험에서 자국을 방어할 방안이 만들어지는 역설을 참고한다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북한 당국이 자신의 도시들에 군사적·지정학적 논리를 투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 검토한 행성적 도시화론과 도시지정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다항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진지적 도시화의 특성을 제시한다.

#### 다.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의 특성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를 세 가지 특성(분산된 도시 간 구성 + 도시 간 교통 인프라의 불균등발전 양상 + 분산된 공간적 특성을 정당화하는 담론의 고안)으로 나누어 살핀다.<sup>29/</sup> 첫 번째 특성은

29/ 진지전 도시화와 유사하게 군사학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총력전과 요새도시를 들 수 있다. 총력전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전쟁 수행에서 인적, 물질 자원을 대량으로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한 것에서 기원한다. 총력전은 일제의 조선 식민지 통치에도 적용되었다(이종구 2010; 허은 2010; 유지아 2022). 전쟁 상황에서 국가가 사회에 미치는 실질을 주목한 총력전 개념은 지정학적, 군사적 논리가 국가의 도시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는 진지전 도시화와 일정한 공통분모가 있다. 하지만 ‘총력(總力)’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듯이, 공간적 스케일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공간에 대한 압도적이고, 전일적인 국가의 실천과 그 효과를 주목하는 총력전 개념은 국가 아래 상이한 스케일 간의 공간적 관계(도시-도시, 도시-비도시 관계 등)에 따라 도시화가 전개되는 것에 방점을 두는 진지전 도시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진지전 도시화가 지정학적 역학과 관련되지만, 총력전이 가정하는 전시(戰時)보다는 평시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도 각 개념으로 들여다 볼 분석내용에 차이가 다소 있다. 다음으로 요새도시이다. 요새도시는 일제 식민지 시기의 일본군이 전쟁물자를 수송할 안전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군사요충지를 가리키며, 주로 해안에 조성되었다(김윤미 2016; 김경남 2012). 군사적 논리와 도시공간 간의 형성 간의 관계를 본다는 점에서 앞서 진지전 도시화에 영감을 준 도시지정학과 연결될 지점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요새도시로 형성된 북한도시들이 김일성 집권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진지전 도시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요새도시 개념은 군사기지로써 역할과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에 국한해 연구됐다는 점에서는 총력전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지전 도시화 개념과 일정 부분 공통분모가 있지만 이들 개념이 진지전 도시화 개념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진지라는 공간적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북한의 분산된 도시 간 구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공간계획에 따라 도시의 물리적 규모의 확대를 지양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은 최고지도자들이 유사시에도 생산을 지속하려는 군사적 의도가 분산된 공간계획을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분산된 공간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진지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방공업을 포함한 “지방경제”(양문수 2004; 윤세라 2021)의 발달이 관건이다. 주로 중공업(주로 국방산업)이 속하는 “중양경제”와 구분되어 각 지역의 소비재 생산을 위한 경공업이 핵심인 지방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가동이 어려워져 침체하였다(양문수 2004).

지지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다시 정책적 관심을 얻게 된 시점은 김정은 집권 초기였고, 집권 10년 차를 지나는 시점에서 대내외적 복합위기(대북제재 + 지역불균등발전 + 대외관계 악화(특히,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 결렬) +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직면한 북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지로 중앙의 지원 없이 지역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력갱생형 지방경제 활성화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황진태 2023b, 124-125).

두 번째 측면은 각 진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저발전 상태이면서도 평양 중심의 인프라 투자집중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식민지 수탈정책에 적합한 기형적 인프라 구조(자원매장지와 항만 중심의 인프라 건설)와 남아 있던 인프라마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이후 추진된 전후 복구과정에서 김일성은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건설을 중시했다. 하지만 선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는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정권의 투자가 미

미하면서 진지 간 연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저발전 상태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인프라 수준 차이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고속도로 건설은 김일성 정권에서 시작되어 김정일 정권까지 수립, 추진되었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기존 고속도로망이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은 인프라를 통한 자본, 물질, 사람의 순환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등발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평양과 고속도로로 연결된 지역들이 보다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무기개발에 따른 대외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 19로 인한 자체 국경봉쇄 등 북한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국면들과 국가재정에서 국방비 비중이 높고 인프라 투자 비중이 낮은 상황과 맞물리면서 추가 인프라 건설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선대에 건설된 인프라를 현상 유지하는 방안<sup>30/</sup>을 택했을 수 있다.

세 번째 측면은 진지전 도시화의 분산된 공간적 특성의 유지를 정당화하는 담론의 역할이다. 각 도시의 관리 및 성장을 도시 내부의 자원, 인력으로 충당할 것을 장려하는 자력갱생 구호는 분산된 도시 간 구성을 이루는 진지전 도시화와 잘 들어맞는다. 자력갱생 구호는 선대부터 존재했지만, 김정은 집권 중반기인 2016년을 기점으로 구호의 사용이 급증했다는 사실(홍민 외 2021, 34-35)은 새로운 젊은 지도자도 경제위기의 근원인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이 2016년 4~5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된 시점은 자력갱생 구호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즉, 김정은 정권에서

30/ 더불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발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력갱생 구호의 부활은 단순히 지역발전, 도시관리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외관계, 지정학적 고려와 긴밀히 관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공간과 대외관계/지정학적 고려는 평해튼으로 호명되는 평양의 대규모 도시건설을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 틀 짓기 (framing)를 하는 담론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핵·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평양의 도시건설 사업들과 절묘하게 ‘타이밍’(홍민 2017, 68)이 맞으면서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도시건설의 상징성이 더욱 부각된다. 선대부터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김일성 1981, 623)로서 정치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양은 ‘핵심진지’의 위상을 선점했었다. 평양에 대한 위계성이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선전되는 환경에서 김정은 집권 후 북한 매체를 통해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평양의 도시건설 이미지를 형성한 것은 비록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는 주민이더라도 자신이 머무는 진지뿐만 아니라 핵심진지인 평양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담론적 측면의 두 번째 양상은 북한주민들의 동의와 실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추상적인 정치적 구호 수준에서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심리까지 건드리는 담론의 고안이다. 각자 자신이 거주하는 ‘작은 진지’들을 튼튼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하는 자력갱생은 김일성 시기부터 사용된 오래된 구호이지만 김정은 집권 중반기에 자력갱생이 급증하게 된 상황은 김일성 시기와는 다른 환경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야경(〈그림 II-4〉)에서 나타나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군사실험에 집중된 정권의 재정투자와 대북제재의 효과는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저발전을 심화했다.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지역 불균등발전의 심각성은 역대 최고지도자 중에는 처음으로 김정은이 당대회(2021년 1월 개최)라는 공개석상에서 지금까지의 북한경제는 “불균형적인 발전”이었다고 직접 인정했다(황진태 2023b, 124). 집권 십 년에 가까워진 시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본 인도 불균등발전에 책임이 있음을 일부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최고지도자조차 이전 지도자들과 다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자력갱생 구호를 재활용하는 것 이상의 추가 담론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는 “도시부럽지 않은”이라는 표현의 증가를 주목한다.<sup>31/</sup>

자력갱생 구호 사용이 급증한 2016년부터 북한매체에서 사용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도시부럽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불균등발전의 결과인 발전된 평양처럼 도시에 거주하고 싶은 비평양 거주 주민들의 욕망이 표출되는 것을 북한 당국이 일정 수준 용인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그들이 실제 평양으로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김으로써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저발전된 도시를 평양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자력갱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분석적 차원에서 나누어 살핀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의 세 가지 측면은 실제 진지전 도시화 과정에서는 상호 연동되어 작동할 것이다. 처음 개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세 가지 측면은 후속 연구에서 더욱 분화되거나 본고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른 측면들이 추가로 발굴될 수 있다. III장에서는 개념의 토대를 다지는 선행 작업으로 제기한 세 가지 측면을 시론적 수준에서 확인한다.

31/ 북한의 담론/이데올로기 연구에서 “도시부럽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주목한 선행연구는 없다.



---

# Ⅲ.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분석: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분석: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 1. 선대의 진지전 도시화의 형성배경 및 특성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을 이해하려면 김일성 집권시기부터 북한도시에 새겨진 공간적 경로의존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사회주의 도시계획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도시와 촌락의 불균등발전을 피하고자 대도시의 성장억제를 지향한다(김원 1998; Murray and Szelenyi 1984; 황진태 2023b: 110-111). 1962년 8월 8일 창성연석회의에서 시와 읍 사이에 놓인 행정단위인 군(郡)의 역할을 강조한 김일성의 발언에서도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합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였던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폐단이 나타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을 도시에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여러 곳에 건설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82b, 253, 밑줄은 인용자 주).<sup>32/</sup>

32/ 김일성은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도 “우리는 도시의 규모를 절대로 크게 하지 말고 소도시 형태로 여러 곳에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

“공장, 기업소들을 모든 군들에 골고루 배치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전적으로 맞습니다”(김일성 1982f, 247).

위 인용문들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방침을 따라 인구와 공장이 도시에 집중하지 않는 분산화를 주장했다. 평양에 관한 국내 대표 연구 중 하나인 임동우(2011)도 김일성이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강조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김일성 1994)를 언급하면서 “이는 물론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에 의거한 것이며, 모든 도시에 공업과 농업을 고르게 분포시켜야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엥겔스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다”(87쪽)라고 밝혔다. 임동우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도시 및 공간계획에서 분산화 지향의 근거를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국한했을 뿐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이 북한 최고지도자들에게 미쳤을 영향과 이와 관련된 그들의 발언은 주목하지 못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북한의 공간계획에서 군사적·지정학적 측면이 고려되었음을 김병로(1999)가 주목했다.<sup>33/</sup> 그는 군(郡)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립체제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면서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김일성, 김정일이 유사시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분산된 공간계획을 지향했음을 포착했다. 필자는 김병로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보다 풍부하게 김일성·김정일 텍스트들을 검토하여 군사적·지정학적 측면과 북한도시와 인프라 건설 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려 한다.

---

를 운영하는데도 편리하고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발전시켜나가는데도 좋습니다”(김일성 1982c, 173)라며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33/ 김태운(2022)은 한국전쟁 시기 평양의 도시공간이 폭격을 맞은 지역과 폭격을 맞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북한 당국이 어떻게 산업을 유지하고, 방공정책을 세웠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도시지정학적 시각이 엿보이는 연구이다. 다만 휴전 후 평양의 재건과정 분석에서는 전쟁 시기에 다른 군사적·방공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평양 이외 다른 북한도시들을 포함한 북한의 공간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국과 대치하면서 국가만들기가 한창인 196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의 북진통일론을 경계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선은 1964년 2월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 결론에서 밝힌 “군사진지의 요새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온 나라의 요새화”로 잘 드러난다.<sup>34/</sup>

“군사진지를 요새화한다는 것은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어 시설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와 싸우는데서는 튼튼한 방어진지에 의거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은 우리나라에 산이 많은 것이 진지를 요새화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 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나라의 모든 힘과 재산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온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튼튼한 방어시설들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김일성 1982a, 257, 밑줄은 인용자 주).

위 인용문은 한국전쟁(북한 입장에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일성이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온 나라의 가는 곳마다” “군사적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김일성의 인식은 도시의 인프라 건설 방향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는 적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장, 기업소들을 도시에만 집중시켜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단번에 많은 공장들이 파괴될 수 있으며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공장들을 옮기지

34/ 김정일은 1982년 시집에서도 1960년대 김일성이 주장한 ‘전체 인민의 무장화’, ‘온 나라의 요새화’와 차별화 없이 아버지가 사용한 개념들을 반복했다.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어체계를 세우자면 또한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합니다”(김정일 1996, 188).

않으면 안 됩니다. ... 그러나 공장, 기업소들을 온 나라에 분산시켜 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공장들을 그렇게 많이 옮기지 않고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업을 온 나라에 골고루 배치한 우리 당의 조치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견지에서 보나 국방의 견지에서 보나 아주 옳은 것입니다(김일성 1982f, 249-250, 밑줄은 인용자 주).<sup>35/</sup>

위 인용문이 발표된 1963년 4월 시점에서 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장 분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일성 본인이 말했듯이 분산된 공간계획은 이념적 측면(“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견지”)과 함께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 군사적 논리(“국방의 견지”)도 복합적으로 결합되었다. 특히, 아래 인용문들은 사회주의 이념적 측면의 언급은 생략되고 군사적 논리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겪은 전쟁 경험이 김일성이 구상한 공간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전력생산의 예비를 많이 조성하여 놓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하여도 전력에 대한 애로를 느끼지 않을 것이며 이르는 곳마다에 공장을 차려놓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면 평화시기에는 농촌을 전기화하고 지방산업공장들을 돌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쓰니 좋고 전쟁시기에는 전시생산을 보장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김일성 1982d, 303)

“지도일군들이 해변가에만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평화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일단 유사시에 대처할 준비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물론 화학공장 같은 것은 해변가에 건설하는

---

35/ 인용문과 유사한 김일성의 발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 결론에서도 확인된다. “도시에만 공장을 집중시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그것들을 옮기기가 힘들고 적의 공습이나 당하면 한꺼번에 다 마사질 수 있다”(김일성 1982a, 254).



것이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변가는 전쟁이 일어나면 함포사격도 많이 받고 폭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산골짜기에 공장을 건설하면 함포 사격은 면할 수 있습니다”(김일성 1982e, 416).

위 두 번째 인용문인 해변가 공장 건설에 대한 1964년 발언에서 김일성은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이 참여한 베트남전쟁과 라오스내전이 진행되는 “정세를 보면”(김일성 1982e, 416)서 유사시 대비를 강조했다. 즉, 남북한은 휴전상태지만 국제정세라는 외부요인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분산된 공간계획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이디어로부터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았다.<sup>36/</sup> 1964년 3월 발표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김정일 2009a)에서는 앞서 살핀 김일성(1982f)에서 사용된 “국방의 견지” 표현마저 그대로 차용하여 김일성의 논의를 따랐고, 1968년 2월 행한 담화(김정일 1992)에서도 김일성의 견지를 유지했다.

“군(郡: 한자는 인용자)을 거점으로 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상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 ...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전쟁관점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 ...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당은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생산시설들을 소개하여 안전지대에 분산배치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지방공업기지들을 새로 꾸리도록 하였다”(김정일 2009a, 429).

36/ 김정일 저작과 김일성 저작 간의 뚜렷한 내용적 차이점은 김정일은 문화예술, 선전선동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간계획에 대한 김정일의 견해가 김일성과 차별화되지 못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실제 재건을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사실로도 공간계획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시생산준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적비행기의 폭격이나 함포사격에 공장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비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 전시에 인민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보장하는데서 지방산업공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김정일 1992, 330-331).

이상 김일성·김정일 텍스트에서 사회주의 이념뿐만 아니라 북한이 겪은 한국전쟁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진지’로서 역할을 강조했음을 확인했다. 즉, 사회주의의 이념적 측면과 함께 한국전쟁의 경험과 국제정세(베트남 전쟁 등)의 역학 속에서 북한의 도시들은 전시에 개별 생존이 가능한 형태를 목표로 조성되었다. 뒤에서 살펴볼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도 이러한 특성을 띠지만 선대와는 다른 차이도 나타난다.

---

## 2.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 분석

### 가. 공간분석: 도로망을 중심으로<sup>37/</sup>

선대의 진지전 도시화는 전후 복구의 맥락 속에서 교통 인프라 복원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자원 탈취를 목적으로 기형화된 교통망<sup>38/</sup>을

---

37/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도로, 철도, 공항, 운하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도로와 함께 철도도 다룰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기간에 연구자 단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 철도는 제외했다.

38/ 『조선교통운수사3(자동차운수편)』에서는 일제가 한반도에 구축한 도로망에 대해 “우리 나라의 자원과 농산물을 약탈하고 대륙침략을 감행할 목적 밑에 일제는 북남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와 그것을 항구도시들과 연결시키는 도로 즉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도로들만 건설하였다”(김준기 외 1991, 29)라고 평가했다.

교정하고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교통 인프라<sup>39)</sup>를 복구하여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하려 했다. 반면에 김정은의 진지전 도시화는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정권에서 북한이 처한 국내외 환경의 영향과 긴밀히 연관됨을 시사한다.

### 1) 전국적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로망 구축

북한의 공업종합출판사에서 출간된 『조선교통운수사3(자동차운수편)』(김준기 외 1991)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 도로망 및 자동차 산업의 발달사를 정리하였다. 이 책은 한국전쟁 시기 파괴된 도로망을 복구, 발전시키는 데 김일성의 전지적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체제 옹호적 기술(記述)로 시기별 사건들에 대한 내막을 알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의 도로망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인식, 입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문헌이다. 이 문헌을 중심으로 김일성의 진지전 도시화는 도시 간의 단절성, 폐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상호연결성을 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화물수송량은 1954~1955년간에 500만 톤 이상에 달하게 할 것이며 여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내에서도 도시 간의 여객자동차정기운행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 1980, 27).

1953년 8월 5일 제6차전원회의 전후복구에 관한 보고에서 나온 김일성의 위 발언에서는 경제성장과 긴밀히 연관된 화물수송 부문

39) 위의 같은 책에서는 미국의 폭격으로 북한의 도로망이 상당히 파괴되었음을 언급했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주요간선도로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주요간선도로들은 전쟁시기 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심히 파괴되었고 배수시설들도 전반적으로 다 파괴된 상태에 있었다. ... 특히 미제침략자들은 3년간의 전쟁기간에 크고작은 다리들을 모조리 파괴하였다”(김준기 외 1991, 110).

뿐만 아니라 도시 간 여객수송의 발전까지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인민경제발전 5개년(1957~1961)계획에서는 “여객수송인원을 1억 3,500만 명에 이르게 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김준기 외 1991, 183)을 설정했고, 이어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에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 실현과 지방공업의 발전을 목표로 전국 주요 간선도로의 포장공사가 진행되었다.

김준기 외(1991)가 당시의 포장공사를 경제발전과 함께 “국방력을 더욱 강화”(209쪽)하는 계기였다고 평했다는 점에서 김일성이 도로망의 발전수준과 군수물자의 이동성 간의 관계를 중시했음을 시사했다. 즉, 김일성의 진지전 도시화는 유사시 개별 도시의 자력 생존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시 간 이동을 돕는 인프라를 통하여 도시 간 연결성이 유지되는 형태를 취하였다.<sup>40/</sup>

1960년대 추진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이 “성공적으로 수행”(김일성 1983, 236)되어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김일성 1983, 235)되었다고 평가한 김일성은 1970년대 추진될 6개년인민경제계획(1971~1976)에서도 “수송의 긴장성”(김일성 1983, 272)을 푸는 것이 경제발전의 관건으로 보고 도로포장 및 도로건설의 지속적 투자를 지시했다(김준기 외 1991, 266-268).<sup>41/</sup>

1970년대에 들어서 “모든 지역들에 철도나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지방공업발전에서 자동차수송은 결정적인 역할”(김준기 외 1991, 239)을 맡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도시별로 분산된 공장들

---

40/ 1974년 3월 7일 전국공업대회 연설에서 김일성은 국방의 견지에서 철도를 논하면서 도시 간 연결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계-혜산-무산 사이의 철도 건설을 빨리 끝내야 ... 공업원료와 연료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원활히 보내줄 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 전수수송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라진-평양 사이의 철도는 해안선을 끼고 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김일성 1985, 131).

41/ 그 결과, 1970년과 1976년 말 사이에 도로포장 총연장길이는 3배가량(총 2,116km로) 늘어났다고 자평했다(김준기 외 1991, 268).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로망을 강조한 것이며, 또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김준기 외 1991, 241)하는 것과 도로 인프라 간의 관계,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조용하여 “관광빠스”(김준기 외 1991, 311)의 수요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현대육상교통 핵심 인프라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1973년 3월에 수립된다(김준기 외 1991, 325).

**그림 III-1** 북한의 주요 도로망<sup>42/</sup>



출처: 김혜진(2020, 6).

42/ 후술하겠지만 인용한 김혜진(2020)의 지도에서는 향산과 희천 사이에 고속도로가 연결된 것(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평양향산고속도로는 본래 향산이 아닌 희천까지 연결되는 것이 원안이지만,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향산에서 희천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건설되지 못하고 향산이 종착지점이 되었다. 위성사진(<그림 III-2> 참조)을 통해 현재까지도 희천 방향의 중단된 공사 흔적이 확인된다.

평양-원산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최상위 국가간선도로는 평양과 각 도를 연결하는 1급 도로였다.<sup>43/</sup> 1급 도로의 건설현황을 통해 앞서 북한 당국이 강조했던 전국적으로 도시 및 지역 간 상호연결성을 높이는 균형발전적인 정책방침을 실제 공간에 투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에는 1급 도로망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평양과 원산이 연결된 1급 도로를 중심으로 H자형 형태를 나타내는데, 서부지역의 도로망은 평양-신의주, 평양-만포 구간으로 두 갈래로 펼쳐져 있고, 동부지역의 도로망은 북천-혜산, 원산-라진 구간을 중심으로 두 갈래로 펼쳐져 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부지역에도 1급 도로망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이 균형 지향적 도로망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44/</sup>

---

43/ 참고로 2급 도로는 도와 도를 연결하고, 3급은 도와 군, 군과 군을 연결하고, 4급은 군과 리를 연결하고, 5급은 리와 리를 연결하고, 6급은 리 안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김일성 1982c, 178-179; 안병민 2014, 38).

44/ 일찍이 1968년에 밝힌 육상교통 발전방향에 대한 김정일의 의견에서도 동부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량강도와 같이 철길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산간지대의 륝운 사업을 발전시켜야 그 지대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게 륝운사업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량강도를 비롯한 산간지대에서 륝운사업이 뒤떨어져 있습니다”(김정일 2009b, 488-489). 당시 최고지도자의 아들인 김정일이 특정 부문을 뒤떨어졌다고 평가한 것은 관련 정책 실무자들의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III-1 북한의 1급 도로 현황

| 노선이름   | 길이(km)  | 포장도로 길이(km) |
|--------|---------|-------------|
| 평양~개성  | 193.6   | 193.6       |
| 평양~남포  | 54.8    | 49.3        |
| 평양~원산  | 231.1   | 43.9        |
| 평양~신의주 | 228.8   | 82.7        |
| 평양~만포  | 361.5   | 156.2       |
| 원산~나진  | 660.0   | 197.7       |
| 북천~혜산  | 212.2   | 10.4        |
| 사리원~해주 | 75.0    | 75.0        |
| 원산~고성  | 116.7   | 106.6       |
| 원산~김화  | 156.0   | 6.0         |
| 계      | 2,289.7 | 921.4       |

출처: 노컷뉴스 2018.12.5.

다른 한편으로 <표 III-1>의 노선별 1급 도로 현황을 보면, 평양과 연결된 1급 도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1급 도로망의 공간적 분포에서 평양 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양 중심성은 불균등발전 정책의 결과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최상위 도로인 1급 도로를 매개로 산간 및 접경 도시(혜산, 나진 등)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평양까지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논리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선대의 진지전 도시화는 진지처럼 분산된 도시형태가 유지되기 위해 도시 간 인프라의 연결성이 강조되었다. 도시 간 인프라의 개발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물자수송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관광을 포함한 여객수송의 측면까지 고려되었다. 이처럼 김일성 집권 시기 도로교통 인프라 투자와 개발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후 폐허 위에 복구를 해야 한다는 시급한 사회적 필요성과 당시 일시적이었지만 빠른 경제성장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 2) 평양 중심의 불균등발전 지향의 도로망 형성

북한의 첫 번째 고속도로는 1978년 개통된 평양원산고속도로이다. 2000년 개통된 평남고속도로까지 현재 총 6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다(〈표 III-2〉). 한국의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길이: 약 30km)가 1968년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길이: 약 400km)가 1970년 개통된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고속도로 건설은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평양원산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노동신문은 한국의 고속도로를 비난하는 목적의 보도를 하였다.

표 III-2 북한의 고속도로 현황

| 노선명                | 구간                             | 거리(km) | 노폭(m)         | 개통시기  |
|--------------------|--------------------------------|--------|---------------|-------|
| 평양원산<br>고속도로       | 평양-원산<br>(남사분기점-관풍동)           | 196    | 2~4차선<br>(20) | 1978년 |
| 금강산고속도로            | 원산-온정리<br>(갈마다리-온정리)           | 107    | 4차선(14)       | 1989년 |
| 평양강동<br>고속도로       | 평양-강동<br>(합장교-강동읍)             | 33     | 4차선(18)       | 1989년 |
| 평양개성<br>고속도로       | 평양-개성<br>(조국통일3대헌장기념비-<br>판문점) | 162    | 4차선(19)       | 1992년 |
| 평양향산<br>고속도로       | 평양-향산<br>(안흥입체교차로-철벽3다리)       | 119    | 4차선(24)       | 1992년 |
| 평남고속도로<br>(청년영웅도로) | 평양-남포<br>(만경대 교차로-청년다리)        | 44     | 10차선(72)      | 2000년 |

출처: 안병민(2014, 42)을 인용자 일부 수정.

먼저,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1972년 7월 노동신문에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조국근대화를 겨냥하여 가뭄과



수해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근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치엘리트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노동신문 1972.7.21.). 또한 미군과 공동으로 전투폭격기 이착륙 연습을 고속도로에서 시행한 것을 비난(노동신문 1978.3.16.)하거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죽음의 도로”(노동신문 1973.1.17.)로 묘사하는 등 비난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체제경쟁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되면서 아직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속도로에 대해 편파 정보를 북한사회에 전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의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고속도로를 간주하기 시작했다.<sup>45/</sup> 1984년 11월 김정일은 북한판 국토종합개발계획인 국토관리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망 건설 방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도로를 많이 건설하여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에 맞게 고속도로를 계획적으로 더 많이 건설하며 필요한 산업도로, 포전도로, 립산도로도 건설하여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을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 1998, 156, 밑줄은 인용자 주).

앞서 균형적 분포를 나타낸 1급 도로망의 구성에서도 평양 중심적 특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속도로망은 1급 도로망과 비교하면 평양 중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1급 도로망이 동부의 교통결절지인 원산과 서쪽의 결절지인 평양이 나란히 연결되어 H의 중심을

<sup>45/</sup> 1980년대에도 북한매체의 한국 고속도로에 대한 비판은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가령, 주한미군이 고속도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를 보도하거나 막대하게 거둬들이는 통행세를 한국정부가 전쟁준비와 정권유지 자금으로 전유한다는 식의 보도이다(민주조선 1987.4.2.; 민주조선 1987.6.20.).

형성한 것과 달리, 고속도로 노선은 금강산고속도로<sup>46/</sup>를 제외하고 전부 평양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평양 중심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1급 도로망은 산악지형인 북동부 양강도와 북서부 자강도까지 도로망이 뺏어져 있지만, 고속도로망에서 동부지역은 원산에서 멈추고, 서부지역은 향산에서 멈춘다. 즉,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도 고속도로망에서 배제되었다. 고속도로망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은 인적, 물류 이동의 규모와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저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속도로망의 평양 중심성은 지역 불균등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앞서 김정일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발언을 했던 1984년 11월은 평양원산고속도로만이 개통되었고, 아직 다른 고속도로 건설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가 밝힌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을 완성”한다는 것은 전국에 도로망이 고르게 연결된 상태를 가리키며, 이러한 최종단계로 가는 데 “고속도도로를 계획적으로 더 많이 건설”한다고 주장했다(김정일 1998, 156). 그렇다면 <그림 III-1>에 그려진 고속도로망은 건설이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 도로망 완성을 향해 고속도로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멈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령, 향산과 원산까지 건설된 고속도로망은 1급 도로 구간을 따라 서 북쪽으로 고속도로가 추가 건설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47/</sup>

46/ 사실 금강산고속도로도 평양원산고속도로와 연결되고(“평양-원산사이 고속도로와 련결되면서 금강산에까지 이르는 원산-금강산사이 고속도로는...”(노동신문 1989.6.24.)), 평양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운송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원산-금강산사이의 고속도도로 건설이 완공됨으로써 조선이 명산, 금강산으로 가는 [대부분 평양에서 오는: 인용자] 관광객들의 편의를 더 잘 도모해주며...”(노동신문 1989.6.8.))에서 평양 중심성과 무관하지 않다.

47/ 이러한 연구자의 예상은 2018년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을 당시, 북한이 기존 고속도로 개보수와 더불어 1급 도로를 고속도로로 현대화하는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노컷뉴스 2018.12.5.).

그림 III-2 평양향산고속도로의 건설 중단된 향산-희천 구간



출처: Google Earth(촬영일: 2022.9.28.)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소련 해체 및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어지는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와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까지 심대한 체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 당국으로서는 1980년대 초중반 유지되었던 고속도로망의 전국적인 균형적 배치 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건설 중이던 고속도로 구간마저 본래 계획보다 축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평양향산고속도로는 본래 종착지가 향산으로부터 북동쪽 약 20km(직선거리 기준) 거리에 위치한 희천까지 연결될 예정이었지만, 향산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위의 위성 사진(<그림 III-2>)에서 현재까지도 공사가 중단된 채 남겨진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 두 개의 고속도로(평양-향산과 평양-개성 구간)를 개통한 이후부터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이 착공된 1990년대 후반까지 고속도로 건설이 없었던 것은 고난의 행군이 국가정책의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이던 1999년 7월에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 관련 기사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유럽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혁명 앞에는 엄중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며 북한 당국의 국제·국내적 위기의식이 표출되었고,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이 “단순한 건설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규정되었다(노동신문 1999.7.19.). 평양남포고속도로 완공을 기념하는 김정일의 담화에서는 그가 1990년대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 밑에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어떻게 뚫고 사회주의를 고수해나가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던 평양-남포사이의 고속도로건설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시작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55돛에 완공할 것을 결심하고 이 과업을 청년동맹과 청년들에게 맡기였습니다”(김정일 2013, 261, 밑줄은 인용자 주).

김정일의 위 담화를 통하여 체제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 고난의 행군이라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위기의 와중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고속도로건설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시작하여”) 정권의 역량을 증명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위

기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은 도리어 위기를 심화하는 비합리적 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형 토목공사는 유희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내수소비를 진작하는 효과와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려는 투자 측면에서 합리적 조치일 수도 있다(Harvey 1982). 대표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한 미국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6개 댐 건설을 포함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규모 식량난이라는 정권 차원의 위기에 처하면서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북한주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이 약해진 것을 의식하여 위기로부터 벗어날 해결책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이끄는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증명과 건설에 참여하는 북한주민들의 내적 단결이라는 정치적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다.<sup>48/</sup> 평양남포고속도로의 정식명칭을 “청년영웅도로”로 정한다고 발표하면서는 “가장 준엄하고 어려운 시기에” 청년과 군인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대통로”인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치하하면서 주민들로부터의 지지와 내부 결집을 견고하게 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노동신문 2000.10.12.).

다음으로 주목할 지점은 평양남포고속도로의 시작과 끝이 갖는 도시지리적 함의이다. 먼저, 북한 당국에 남포의 의미를 살펴보자. 197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은 남포를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제2평양”(김일성 1990, 114)으로 성장시키려는 구상을 피력했다. 그는 남포가 수도의 서쪽 관문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중요성도 있지만, 기존 남포항과 신항만을 추가 건설하여 남포를 “현대적인 항구문화도시”

48/ 평양남포고속도로의 건설 기간에 북한매체는 도로포장공사(노동신문 2000.5.3.; 노동신문 2000.6.1.; 노동신문 2000.9.22.), 전국 각지에서 북한주민들의 노동 지원 등의 기사들을 세부적으로 보도했다(노동신문 2000.1.21.; 노동신문 2000.2.26.). 이 기사들은 지도자를 찬양하고 주민들의 결집을 강조했다.

(김일성 1987a, 503) 또는 “현대적인 해양도시”(김일성 1987b, 47)로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진출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일성 1987a, 503).<sup>49/</sup> 당시 김일성은 남포의 발전 구상에서 평양과 남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김일성 1987a, 510; 김일성 1990, 115).

하지만 당시에는 남포와 고속도로로 연결될 평양의 출발지점이 어디인지까지 논의가 구체화되진 못하였는데, 이후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고속도로의 평양발 출발지점이 평양의 북서쪽 지역인 광복거리로 결정되었음이 알려졌다. 광복거리는 1989년 개최했던 제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대비하여 각종 주거, 교육, 문화시설이 새롭게 조성된 일종의 신도시였다(김민아·정인하 2019). 아래 기사는 김정일이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평양의 도시화 방향을 피력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광복거리 건설을 발기하시였다. 이것은 평양시를 남포시와 연결된 세계적인 대도시로 꾸리시려는 원대한 구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하나의 체육도시를 방불케 하는 청춘거리와 평양교예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현대적인 호텔들을 포함하여 방대하게 건설된 광복거리 건설을 통하여 평양시를 남포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제가 마련되였다”(노동신문 1999.7.19., 밑줄은 인용자 주).

49/ 당시 남포에는 매년 1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했고, 앞으로는 3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김일성은 예상하면서 남포의 개발 필요성을 피력했다(김일성 1987b, 50).

그림 3-3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 보도기사



출처: 노동신문 1999.6.30. 3면/뉴스 1.

그림 3-4 평양남포고속도로 구간 주변에 신축된 살림집 단지



출처: 노동신문 2000.11.16. 3면/뉴스 1.

위 인용기사에서 김정일이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이 단순히 두 도시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두 도시 사이의 40km 구간을 도시화하려는 방안(“평양시를 남포시와 연결된 세계

적인 대도시”, “평양시를 남포방향으로 확대”)도 염두에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평양 광복거리에서 시작되는 고속도로 구간을 따라서 수천 세대 살림집 건설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고속도로 일대를 도시공간으로 만들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노동신문 2000.6.22., <그림 III-4>). 즉, 1970년대 후반 김일성이 기대했던 “현대적인 항구문화도시”(김일성 1987a, 503)로서 남포의 발전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 남포와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평양이 “항구를 낀 세계적인 도시”(〈그림 III-3〉)로 발전하기 위하여 남포의 미래상(想)이 평양의 미래상으로 전유된 것이다.

북한의 첫째 고속도로인 평양원산고속도로가 완공된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전국 각지로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려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인한 원조경제의 중단과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 19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김일성의 죽음 등이 응축된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제한된 정권의 재원으로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을 완성하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기 전에 추진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과 이와 동반된 도시화 전략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였다.<sup>50/</sup>

김정일 정권의 이러한 미완의 시도는 김정은 정권에서 평양 중심의 불균등발전을 지향하는 도로망 특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확인한 평양향산고속도로 구간에서 공사가

---

50/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항구를 낀 세계적인 도시’로 평양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성공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다만 위성사진으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 구간의 미미한 도시화 수준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계획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평할 수 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북한 당국의 사후 평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북한 당국으로서도 성공으로 보진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단된 희천 방향 구간은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난 2000년대 들어서는 구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겠지만 내버려두었다. 반면에 고난의 행군이 채 끝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전 고속도로 건설(최대 4차선)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10차선 규모의 평양남포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사실은 제한된 정권의 재정을 북한 당국이 지방보다 평양 중심으로 집중하는 공간선택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일 정권 말기 북한 당국의 공간선택성은 김정은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3)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중심 도로망의 불균등발전 경향성 심화

김정은 시기의 진지전 도시화와 역대 정권의 두드러진 차이는 북한 당국에서 도시 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 투자가 줄어들면서 교통 인프라를 매개로 한 평양 중심의 불균등발전 경향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sup>51/</sup>

51/ 본 연구는 북한의 도시 간 교통 인프라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북한도시 내부의 도로는 논외로 했다. 다만 북한매체에서 도로에 대한 보도기사가 꾸준히 나오는 점을 인지한 독자들은 본 연구자가 김정은 정권이 도로에 관한 관심이 적고, 투자가 거의 없다는 평가에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설명을 추가한다. 최근 노동신문에 실리는 도로 관련 기사들은 김정은이 “도로건설과 관리를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으며 국토의 면모도 일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사를 읽은 독자는 김정은이 도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노동신문 2022.6.30.; 노동신문 2022.10.5.; 노동신문 2022.11.13.). 하지만 기사에서 보도되는 도로는 김정은 또는 중앙 주도로 추진되기보다는 자력생명의 맥락에서 해당 지역의 군 또는 도 단위에서 추진된다. 또한 보도되는 도로들은 도시 간 연결도로가 아닌 도시 안의 규모가 작은 도로들이다. 드물지만 도시 간 연결도로(가령, 강계와 만포 구간)에 대한 개건공사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공사규모가 작고 해당 도 차원에서 추진된다(노동신문 2022.5.28.). 본 연구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십 년 동안 평양과 도소제지 9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 안의 도로와 교량의 건설상황을 십 년 치 인공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추적한 바 있다. 대규모 살림집 건설로 새로운 도로건설 계획이 많은 평양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들에서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다(홍민 외 (2023)의 사회간접자본 분석 참조). 정리하면, 북한매체만 보고 북한 당국이 도

김일성은 전시에 공격받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공장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별 도시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분산된 도시형태를 지향했지만, 이러한 분산성은 도시가 외부로부터 고립된 형태가 아니라 도시 간 원활한 물류, 인적 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 어디서나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접근에 차별 없는 전반적 도로망 완성을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감행과 평양향산고속도로의 향산-희천 구간 미완성 결정에서 확인했듯이, 전반적 도로망의 완성을 주창했던 김정일 정권도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대내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제한된 정권의 재원으로 도로교통 인프라를 평양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공간선택성이 두드러지는 변화가 생겼다. 유사한 대내외 위기가 지속 또는 악화일로에 있는 김정은 정권에서도 평양 중심의 도시 간 도로교통 인프라의 불균등발전 양상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도시 간 교통 인프라의 불균등발전 양상이 이전 정권과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은 중앙정부가 도시 간 교통 인프라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기에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과 달리 2023년 현재 김정은이 집권한 지 십 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발표된 바가 없다. 즉,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는 평양 중심의 도로망을 건설하면서 불균등발전 양상이 나타났다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사

---

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도시 내부에 건설된 도로보다 규모가 크고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도시 간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에서 처럼 도로관리 책임을 지역 단위, 국민에게 부과하는 방식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특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가령, Dalakoglou 2012 참조). 하지만 이것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실상 투자중지(disinvestment)로 기존 도로망의 전반적 낙후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평양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불균등발전 양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원활한 인적, 물적 이동을 통하여 경제발전효과를 기대했던 도로교통 인프라가 선대에 건설되었으나 그것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김정은 집권 시기까지 지속되면서 김정은 정권에서는 추가적인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현상유지 필요성마저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은 남북한 국내이동 인구를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된 통계를 바탕으로 결합한 것이다. 비록 지속적인 자료축적을 통해 일관되게 구축된 통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의 국내이동 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북한에서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총인구 대비 인구이동 비율이 대체로 5%를 유지했다면, 같은 시기 한국은 20% 비율이었다는 점에서 인구이동의 수준이 현격한 대조를 나타낸다. 1980년대는 북한에서 고속도로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시기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구이동 비율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의 경제활동, 여가활동, 거주지 이동에 대한 제약을 부여한 북한 당국의 인구통제정책(한동호 외 2017)과 이동성을 향상하려는 도로교통 인프라 정책이 상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8년 통계자료에서는 북한의 인구이동 비율이 3.5%로 1980년대보다 더 떨어졌다는 점에서 1990년대의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북한 당국이 인구통제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Ⅲ-3** 남한과 북한의 국내이동 인구

| 연도   | 북한               |                 | 남한               |                 |
|------|------------------|-----------------|------------------|-----------------|
|      | 이동인구<br>(1,000명) | 총인구 대비<br>비율(%) | 이동인구<br>(1,000명) | 총인구 대비<br>비율(%) |
| 1980 | 920              | 5.3             | 8,259            | 21.9            |
| 1982 | 927              | 5.2             | 8,616            | 22.1            |
| 1985 | 882              | 4.7             | 8,679            | 21.4            |
| 1986 | 997              | 5.2             | 8,660            | 21.3            |
| 1987 | 1,134            | 5.9             | 9,309            | 22.6            |
| 2005 | -                | -               | 9,141            | 20.8            |
| 2008 | 746              | 3.5             | -                | -               |

출처: 홍제환 외(2020, 85).

**표 Ⅲ-4** 남북한 도로 총연장 및 고속도로 길이

(단위: km)

| 시점   | 북한     |        | 남한      |        |
|------|--------|--------|---------|--------|
|      | 도로 총연장 | 고속도로길이 | 도로 총연장  | 고속도로길이 |
| 2004 | 25,185 | 724    | 100,278 | 2,923  |
| 2005 | 25,495 | 724    | 102,293 | 2,968  |
| 2006 | 25,544 | 724    | 102,061 | 3,103  |
| 2007 | 25,600 | 724    | 103,340 | 3,368  |
| 2008 | 25,800 | 752    | 104,236 | 3,447  |
| 2009 | 25,854 | 727    | 104,983 | 3,776  |
| 2010 | 25,950 | 727    | 105,565 | 3,859  |
| 2011 | 26,110 | 727    | 105,931 | 3,913  |
| 2012 | 26,114 | 727    | 105,703 | 4,044  |
| 2013 | 26,114 | 727    | 106,414 | 4,111  |
| 2014 | 26,114 | 729    | 105,673 | 4,139  |
| 2015 | 26,183 | 729    | 107,527 | 4,193  |
| 2016 | 26,176 | 774    | 108,780 | 4,438  |
| 2017 | 26,178 | 658    | 110,091 | 4,717  |
| 2018 | 26,180 | 658    | 110,714 | 4,767  |
| 2019 | 26,196 | 658    | 111,314 | 4,767  |
| 2020 | 26,202 | 658    | 112,977 | 4,848  |
| 2021 | 26,203 | 658    | 113,405 | 4,866  |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표 III-5 남북한 자동차 등록대수

| 시점   | 북한         | 남한         |
|------|------------|------------|
|      | 자동차등록 (천대) | 자동차등록 (천대) |
| 2004 | 249.0      | 14,934.1   |
| 2005 | 249.7      | 15,396.7   |
| 2006 | 251.7      | 15,895.2   |
| 2007 | 260.0      | 16,428.2   |
| 2008 | 259.0      | 16,794.2   |
| 2009 | 254.0      | 17,325.2   |
| 2010 | 257.0      | 17,941.4   |
| 2011 | 262.0      | 18,437.4   |
| 2012 | 266.1      | 18,870.5   |
| 2013 | 271.9      | 19,400.9   |
| 2014 | 275.8      | 20,118.0   |
| 2015 | 278.4      | 20,989.9   |
| 2016 | 285.0      | 21,803.4   |
| 2017 | 292.0      | 22,528.3   |
| 2018 | 284.0      | 23,202.6   |
| 2019 | 274.0      | 23,677.4   |
| 2020 | 264.0      | 24,366.0   |
| 2021 | 253.0      | 24,911.1   |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그림 III-5 평양남포고속도로의 평양 진입부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진입부



출처: Google Earth(촬영일: 좌(2020.11.9.), 우(2021.3.5.).

통계청 북한정보포털이 제공하는 남북한 도로 총연장과 고속도로 길이 비교(〈표 III-4〉)와 남북한 자동차 등록대수 비교(〈표 III-5〉)를 보면, 고난의 행군이 끝난 김정일 정권 말기인 2000년대에 도로 총연장은 미약한 증가로 그쳤고 고속도로의 길이 변화는 거의 없었다. 북한과 비교하여 한국 측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도로 인프라를 이용할 자동차 등록대수가 북한은 조사기간에 증감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첫 조사를 시작한 2004년에 24만 대 등록대수를 기록했다가 그로부터 17년 후인 2021년에 30만 대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으로서는 새로운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의 유지 및 보수에 정권의 재정 투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음을 시사한다. 최근 위성사진(〈그림 III-5〉)을 통해 남북한 각각의 수도인 평양과 서울에 진입하는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량을 보더라도 북한의 교통 인프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지속의 측면에서 김일성 정권부터 유지되어 온 중앙집중형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김일성 정권 초기에는 생산요소 투입을 빠르게 하여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부재는 성장을 제약하는 근본 한계를 드러냈다(홍제환 2023, 25). 김일성 정권이 도시 간 이동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추구한 것은 시장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각 도시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동을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 판매를 위한 상품을 선정·생산하거나 시장에서 경쟁해 이윤이 창출되는 ‘도시경제의 역동성’ 대신에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적 지시에 따라 생산품목이 결정되고 혁신을 유도하지 못하는 ‘진지의 경직성’이 초래되면서 북한 당국이 기대한 각 도시의 자력갱생 실현은 어렵기만 하다.

역대 북한 정권에 사회주의는 단순히 경제방식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내부통치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대립구도에서 체제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상수’였다(박형중 2022). 비록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기의 자본주의 체제와 유사한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려는 인프라 건설이 있었다라든가 상수의 상당한 영향력은 인프라 건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악화된 대외관계와 미국, 한국과의 군사적 갈등·경쟁이 지속되는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체제의 경직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의 긍정적 효과가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선대의 판단은 오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대신에 현재의 김정은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도로교통 인프라 투자보다 군사력 강화가 우선한다고 보면서 제한된 정권의 재원을 군비경쟁에 집중 투입하는 한편으로 군사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자력갱생을 주문하며 정권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지우는 방식이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 평양-서부지역의 자력갱생 성공사례 집중

도시 간 연결성이 떨어지는 상태의 진지전 도시화가 유지되려면 진지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지방경제의 발전이 필요하다(양문수 2004; 윤세라 2021). 2018년 ‘한반도의 봄’부터 남북한, 미북 대화가 재개되는 와중에 북한 매체에서는 자력갱생 구호의 사용이 급증하다가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 구호 사용의 정점을 찍고 현재까지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홍민 외 2021, 34-35).

앞서 논했듯이, 체제유지가 최우선인 북한에서 정권의 재정은 지역 불균등발전을 해결하는 데 투입되지 않고 군비증강에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회담 결렬로 대외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떨어지자 기존 구조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다시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라는 자력갱생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평양과 지방, 서부와 동부,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발전은 각 지역의 내생적 요인에 따라서만 발생하지 않고 외생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Coe et al. 2019).

Ⅲ장 앞부분에서는 도로교통 인프라와의 연결성이 지역의 발전수준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평양 중심으로 형성된 도로망이 북한의 지역 불균등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도로교통 인프라와 지역발전의 상관관계를 분별하는 작업은 경제지리학적으로 매우 상세한 데이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북한 당국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열악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자의 현장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북한의 지방경제에 속했던 탈북민 인터뷰로 지방경제의 역동성을 질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도로교통 인프라와 지역 불균등발전의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통일연구원 정은이 박사는 2000년대 이후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품의 국산화, 다양화를 주목하면서 특정 상품의 생산에 어떤 경제행위자(국영공장, 회사, 개인 등)가 주도하고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지를 파악하려 했다(정은이·이해정 2022).



그림 III-6 도시별 집중 생산 상품의 분포도

| 지역 | 서부     |    |     |    |     |      |     |    | 동부 |    |    |      |    |
|----|--------|----|-----|----|-----|------|-----|----|----|----|----|------|----|
|    | 남포     |    |     |    |     | 신의주  | 순천  | 평성 | 라진 | 청진 | 함흥 | 김책   | 원산 |
| 품목 | 담배     | 의류 | 담배  | 의류 | 유리  | 의류   | 신발  | 의류 | 선박 | 선박 | 밧줄 | 철강제품 | 식품 |
|    | 식품     | 선박 | 기계류 | 신발 | 선박  | 신발   | 의약품 | 신발 |    |    | 겔레 |      | 구두 |
|    | 의류     |    | 철제품 | 커펀 | 그물  | 화장품  | 기계  | 가방 |    |    | 비료 |      |    |
|    | 신발     |    | 타일  |    | 침구류 | 비누치약 | 밧줄  | 껌  |    |    |    |      |    |
|    | 화장품    |    | 의류  |    | 커펀  | 의약품  | 껌   |    |    |    |    |      |    |
|    | 비누치약   |    | 신발  |    |     |      |     |    |    |    |    |      |    |
|    | 의약품    |    | 변압기 |    |     |      |     |    |    |    |    |      |    |
|    | 기계류    |    | 충전기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    |     |    |     |      |     |    |    |    |    |      |    |
|    | 전자제품조립 |    |     |    |     |      |     |    |    |    |    |      |    |

출처: 정은이·이해정(2022, 169).

〈그림 III-6〉에는 도시별로 특화된 생산품들의 품목들이 밝혀져 있다. 분포도만 본다면 동부지역에 비하여 서부지역이 특화된 품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이 박사는 이러한 서부 편중의 분포가 발생한 요인으로 교통의 거점, 무역의 거점, 교육의 거점, 소비의 거점, 수도권, 에너지원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가령, 가구를 보자. 본래 북한에서 가구생산시설은 김일성의 분산된 공간계획에 따라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1980년대에는 평양과 함께 함흥에서 생산된 가구의 인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평양의 생산공장은 원료 자재를 중국으로부터 트럭 및 열차를 통해 신의주를 경유하여 들여오면서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다. 결국, 함흥을 포함한 지방의 가구생산은 평양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정은이·이해정 2022, 124-125). 이처럼 교통 인프라는 다른 요인들과 시너지를 형성하면서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표 III-6 연운회사의 지역별 트럭 보유대수

| 도시   | 서부지역 |     |    |    |    |    | 동부지역 |    |    |    |
|------|------|-----|----|----|----|----|------|----|----|----|
|      | 평양   | 신의주 | 평성 | 남포 | 해주 | 개성 | 원산   | 함흥 | 혜산 | 청진 |
| 트럭대수 | 500  | 100 | 15 | 10 | 5  | 5  | 10   | 5  | 2  | 10 |
| 총계   | 635  |     |    |    |    |    | 27   |    |    |    |

출처: 곽인옥(2019)을 바탕으로 필자가 표로 구성.

물류를 이동하는 수송회사의 트럭 보유대수의 지역별 분포에서도 서부지역 도로교통 인프라의 우위를 재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경제성 산하 수송회사인 연운회사는 북한의 차량수송의 50~60%를 차지하며, 본사는 평양에 위치하고 각 지사가 <표 III-6>과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곽인옥 2019). 2017년 기준으로 곽인옥(2019)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트럭이 서부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송회사의 지사별 보유대수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동부지역의 공장이 서부지역에 비하여 운송비 경쟁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국경봉쇄기간(2020~2022년)에 중국과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와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길이: 약 4km)가 완공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다(황진태 2023c, 230-231). 최근 북-중-러 연대가 긴밀해지면서 북중교역의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점에서 2014년에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된 이후 수년 동안 연결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결도로 건설은 본격적인 북중교역 재개의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다.

정은이·이해정(2022, 181)은 동부지역에서 특화되었던 산업들이 서부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 대하여 개별 부문의 특성뿐만 아니라 보다 구조적, 공간적으로 발전된 서부지역과 저발전된 동부지역 간의 지역격차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기존 평양

중심의 도로망에 신의주를 통한 북중교역이 재개되어 대외무역과 해외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면, 평양과 신의주 사이의 서부지역을 포함한 평양-서부지역이 보다 발전되고, 동부지역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sup>52/</sup> 결국 동부지역에 포진된 진지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면 북한 당국도 더 이상 자력갱생 구호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 있다.

## 나. 담론분석

나항에서는 첫째, 북한주민들이 지켜야 할 ‘핵심 진지’로 평양을 규정하고자 평양의 도시건설을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틀 짓기 하는 담론전략을 살피고, 둘째, 평양 이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작은 진지들’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담론전략으로 “도시부럽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주목한다.

### 1) 핵심 진지로서 평양,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도시건설 틀 짓기

북한의 역대 정권에서 도시공간은 최고지도자들의 통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김일성 정권에서는 평양의 전후 복구사업을 독려하려고 소위 “평양속도”신화를 만들었고, 김정일은 후계자 업적 쌓기의 일환으로 1970년대 중반 대규모 살림집들을 건설했다(김태운 2023; 홍민 2017, 31-35). 2012년 준공된 창전거리는 평양에서 약 20년 만에 시행된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으로서 시기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첫 번째 대규모 건설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전인 그의 아버지에서 시작했다. 당시 후계자 수업을 받던 김정은은 아버지로부터 창

52/ 이러한 서부와 동부지역 간의 불균등발전을 이해하려면 정은이·이해정(2022)에서 확인된, 동부지역에 근거한 경쟁에서 밀린 산업들의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전거리 조성의 목적이 평양의 주택수요를 충족한다는 순수한 도시 문제로서뿐만 아니라 통치 측면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의 필요성도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창전거리를 시작으로 려명거리, 송화거리, 화성지구, 서포거리 등 대규모 살림집 건설계획들이 연속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전 정권에서는 없던 특징이다.<sup>53/</sup>

김정은도 선대와 같이 대규모 살림집을 건설해 통치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더 세밀하게 접근하면 선대와 달리 김정은 정권에서는 국내정치적 구도에서만 건설사업을 논하지 않고 대외관계에서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도시건설을 틀 짓기 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 도시건설과 대외관계 간의 연관성을 예리하게 포착한 선도적 연구로는 홍민(2017)을 들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성된 거리와 중요 건설물의 건설‘타이밍’과 핵·미사일 고도화의 주요 활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서로 기묘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홍민 2017, 68).

위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려명거리 건설이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은 신속하게 3월 3일 대북제재를 채택했다. 려명거리 건설계획을 발표한 날짜는 대북제재가 채택된 직후인 3월 18일이었다. 아래 노동신문의 려명거리 준공식 보도에서도 려명거리는 “단순한 거리건설이 아니라” “일수들에게 철퇴를 안기”는 전투로 규정된다.

53/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통치 측면과 아울러 주택개발로 정권과 민간이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측면도 긴밀히 관련된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벗어나는데 관련 연구로는 정은이(2015, 2018), 홍민(2017)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려명거리건설을 단순히 거리건설이 아니라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수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여기고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당에서 정해준 시간애,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웠다”(노동신문 2017.4.14., 밑줄은 인용자 주).

흥미롭게도 북한에서 발간된 려명거리 건설 기념 책자 『려명거리,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리철민 2017)에서는 대북제재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규모 살림집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 당국에도 예상을 벗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사실 려명거리건설의 선포는 보통의 담력으로 누구나 선뜻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다. 지난해 년 초부터 공화국의 자위적인 수소탄시험과 정정당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 군사적 공갈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리철민 2017, 7-8, 밑줄은 인용자 주).

인용한 북한문헌에서는 “누구나 선뜻 내릴 수” 없어 보인 려명거리 건설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자신들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재에 있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홍민이 말한 ‘건설 타이밍-군사행위-대북제재’의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다. 려명거리는 2017년 4월 준공되었고 2018년에는 김정은과 문재인 전대통령 간의 회담에 이어 미북회담이 개최되면서 소위 ‘한반도의 봄’이 도래했다. 려명거리 준공 직후에는 대규모 건설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설령 발표되었다더라도 려명거리 건설에서 확인된 ‘삼위일체’ 내러티브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미북회담에서 공동합

의 결렬로 짧은 봄이 지나고서 잇따른 북한의 군사도발을 통한 대외 관계의 냉각은 또다시 대규모 건설계획에서 려명거리 개발시기와 유사한 삼위일체 내러티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신문 2023년 5월 30일자 2면(〈그림 III-7〉)에는 려명거리부터 최근 완공된 화성지구까지 스펙터클한 건축물 사진들을 배치하고 이러한 건설이 가능했던 지도자 김정은의 역할을 기술하면서 다음 기사처럼 적대국과의 긴장관계를 살림집 건설과 연동한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과 위협을 짓부시기 위한 긴장한 군사작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의 승리의 화살표가 그어지는 경애하는 그이의 집무탁에는 언제나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건설과 관련된 문건들이 놓여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여, 아시는가”(노동신문 2023.5.30.).

이어서 노동신문 2023년 7월 5일 1면(〈그림 III-8〉)에는 “끝없이 번영하는 우리 수도 평양”이란 제목의 정론이 단독 게재되었다. 노동신문에서 정론은 “사람들의 사상에 직접적으로 불을 지피고 그들의 심장에 발동을 걸어야 하므로 주장과 견해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 2003, 86)되는 지면이다. 〈그림 III-8〉에서 보듯이, 신문의 얼굴인 1면을 사진 한 장 없이 한 줄 제목과 나머지 공간을 텍스트로 채우는 정론의 간결한 구성양식은 독자들이 글을 읽기도 전에 기사 형식에서부터 압도감을 느끼게 만든다. 정론에는 주로 군사, 정치, 사상 관련 주제들이 실리는데, 평양을 주제로 정론이 작성되었다는 점은 평양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치적 중요성을 드러낸다. 아래 인용한 정론의 일부 문구에서는 선동적 문체가 확인된다.

그림 Ⅲ-7 평양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에서 김정은의 위업을 찬양하는 기사

주최 11.2.(2023)년 9월 30일 (수요일) **로 동 생 권** 123

## 수도가 달라지고 지방이 변한다, 위대한 당이 펼친

**가**

**습**

**벽**

**찬**

**시**

**대**



주최가 도시의 근대화 상징인 아파트 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위대한 당의 정책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도시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도시의 근대화는 위대한 당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위대한 당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도시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도시의 근대화는 위대한 당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위대한 당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도시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도시의 근대화는 위대한 당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위대한 당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도시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도시의 근대화는 위대한 당의 정책 덕분에 가능했다. 위대한 당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도시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출처: 노동신문 2023.5.30, 2면/뉴스 1.

그림 3-8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수도 평양의 발전에 대한 정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세 수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정론

끝없이 변형하는 우리 수도 평양

1

에서 세계를 뒤흔들었던 조선 수도... 1947 평양이라는 새로운 제명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우물쭈물 양분되어온 인민의 단결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명도라라 우리시 사회주의건설의

세 수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정론

끝없이 변형하는 우리 수도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년 4월 28일(4월 11일) 2023년 7월 15일(수요일)



“미제와 그 추종무리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 같이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이른 시기에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라는 대규모의 창조전역이 펼쳐지리라고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포성이 울리는 전쟁 속에서도 복구건설의 설계도가 펼쳐졌던 영웅도시 평양이 오늘은 포성 없는 전쟁 속에서 사회주의승리의 기념비로 더욱 웅장하게 솟구치고 있다”(노동신문 2023.7.5., 밑줄은 인용자 주)

인용한 정론에서는 노동신문을 읽을 전국의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체제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평양에서의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곧 핵심 진지인 평양을 지켜낸다는 인식과 감정을 고양하는 의도가 보인다.

대북제재의 원인인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속되고 다시 대북제재를 결정할 국가들과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코로나19마저 발발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해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을 북한 당국은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3년 6월 개최)에서 “건설 역사에서 공사량이 가장 많은 올해”(노동신문 2023.6.19.)로 규정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정책 선택지가 건설 이외에는 부재함을 방증한다. <그림 III-7>과 유사한 구성(신축 건축물 사진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텍스트 배치)의 기사들이 빈번하게 작성되고,<sup>54/</sup> 노동신문 1면에 평양을 포성 없는 전쟁터로 규정한 정론이 작성되는 상황은 북한 당국이 직면한 통치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54/ 예컨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들로 눈부신 평양의 모습”(노동신문 2023.6.14.),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최악의 역경 속에서 인민들이 체감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노동신문 2023.6.2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도시건설의 틀 짓기는 ‘포성 없는 전쟁’이라는 비유처럼 실제적인 군사적 요인들과는 무관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군인, 폭탄과 같은 군사적 측면의 실체들도 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도시건설의 틀 짓기를 강화하는 데 동원된다.

**그림 Ⅲ-9** 송화거리 건설을 앞두고 군민대단결을 강조하는 선전화



출처: 노동신문 2021.4.6. 1면/뉴스 1.

실제 군인들이 북한의 도시건설에서 주요 행위자인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 사회에서 군인의 역할은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대민지원, 건설활동과 같은 비군사적 역할로 확대되면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혼재되기 시작했다(김용현·한승대 2016, 255). 2022년 2월 발표된 김정은의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국가방위의 중임을 떠맡아 수행하는 초긴장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놓는 거창한 투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였”(노동신문 2022.2.9.)다고 평가한 것처럼 김정은 시기에 군인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했다. 가령, 송화거리 건설 기간에 발표된 선전화(〈그림 III-9〉)에서 북한 당국은 “거창한 대건설전투”에 투입된 군인과 주민을 나란히 배치하여 핵심 진지인 평양을 지키기 위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림 III-10** 살림집 건설현장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제 폭발물 발견 보도



출처: 노동신문 2023.3.10. 4면/뉴스 1.

다음으로 〈그림 III-10〉은 한국전쟁 당시 땅속에 묻혔던 “미국제 폭발물”들이 현재의 북한 대규모 살림집 공사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과거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현재까지도 지속된다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다.<sup>55/</sup> 즉, “녹은 쓸었지만 장악된 폭약이

55/ 화성지구 건설현장에서도 미국제 폭발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노동신문 2023.5.11.). 1950년대부터 북한매체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제 폭발물이 발견되거나 폭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한국 정부를 비난할 목적의 기사들로 작성되었다(민주조선 1959.12.16.; 노동신문 1964.3.10.; 노동신문 2013.5.9.; 노동신문 2018.5.10.). 북한 당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공격에 대한 북한 측 피해를 정리하여 발간한 한 단행본의 구성에서 세균전, 약발, 고문에 앞서 폭격을 가장 앞에 배치한 것은 북한이 폭격에 대한 피해인식이 상당함을 드러낸다(고상진: 전 도명 1989).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폭발물 보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대로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상태”(노동신문 2023.3.10.)  
는 “사회주의 변화가”로 만들 화성지구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협  
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거의 적대국과 현재의 적대국을 동일  
시한다.

#### 다. 작은 진지로서 평양 이외 도시들, 북한주민의 욕망을 매개한 담론전략<sup>56/</sup>

김정은 정권의 진지적 도시화는 핵심 진지와 함께 작은 진지에 대  
한 담론적 특성이 구분된다. 작은 진지로서 평양 이외 도시들<sup>57/</sup>은  
도시 외부와의 연결성(교통 인프라의 투자중단, 도시 간 이동의 통  
제 등)을 낮추고, 주민의 자력갱생으로 도시가 유지, 관리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진지전 도시화의 특성은 “도시부럽지 않은” 표  
현에도 투영되어 있다. 이 표현에는 평양에 거주하지 않는 북한주민  
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대표적으로 평양)로 이동할 자유가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를 자신이 부러워하는 도  
시처럼 만듦으로써 비로소 부러운 감정이 사라진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북한주민들이 다른 도시를 부러워하게 된 근  
본 원인인 자력갱생 구호 뒤에 숨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원부  
재, 경제활동(구직 및 물류운송 등)과 밀접히 연관된 주민들의 자유

56/ 보고서에 수록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에 대한 분석결과는 통일연구원의 학술  
행사인 제6회 북한도시포럼(2022년 12월 14일 개최)에서 먼저 소개된 바 있다.

57/ 서술의 편의상 ‘대도시’ 평양에 대비되는 공간으로 ‘작은’ 도시라는 용어를 사용  
했다. 하지만 작은 도시의 범주에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촌락 지역도 포함된  
다. 특히, 북한이 도시와 촌락이 혼합된 공간형태인 군(郡)을 지역발전의 주요  
단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도시와 촌락의 깔끔한 분리를 전제하는 방법론적  
도시주의의 시각에서 도시의 범주를 협소하게 보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황  
진태 2023b).

로운 지역 간 이동을 제약하는 인구통제정책, 국제사회가 부과한 경제제재로 인한 북한경제의 전반적 저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지역불균등발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이 빠져 있다. 북한 당국이 제시한 “도시부럽지 않은”의 ‘도시’는 도시를 안과 밖의 경계가 명확한 영역적 용기로 간주하는 방법론적 도시주의의 인식을 담았다.

이처럼 외부의 지원 없는 고립이 강조된 작은 진지 안에서 북한주민들이 부러운 감정을 해소할 만한 발전을 자력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우며, 다른 도시 및 지역과 차별화된 입지적 우위(특정 자원 매장 및 기술 보유)를 갖고 있거나 외부(평양이나 접경도시)와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김정은 집권 시기에 발간된 노동신문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기사 수의 시기별 증감 파악과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과 함께 언급된 지역명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포착한다. 또한 주요 기사들을 담론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증가한 이유를 해석한다.

부럽다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리킨다(네이버 국어사전 2023.5.20. 접속). 즉, 부러움은 개인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부럽다는 표현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심리’로도 자주 활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남부럽지 않게”를 들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유명한 노래인 〈인민의 환희〉 가사에는 “우린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라며 집합적 의미에서 ‘우리’가 호명되고, 김정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

쳐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던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김정일 2012, 135)이라고 발언하면서 체제와 ‘우리’를 직접 연결한다. 즉, 북한매체에서 ‘남’은 북한주민 개인보다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북한 ‘외부’로부터 단일화된 ‘우리’를 가리키며, 따라서 욕망이 반영된 부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에서는 체제 논리에 따라 개인의 욕망이 거세된다.

그런데 집합적 우리로서 표출된 “남부럽지 않은” 표현과 달리 김정은 집권기에 증가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에서는 북한주민 개인의 입을 통해 발화(發話)되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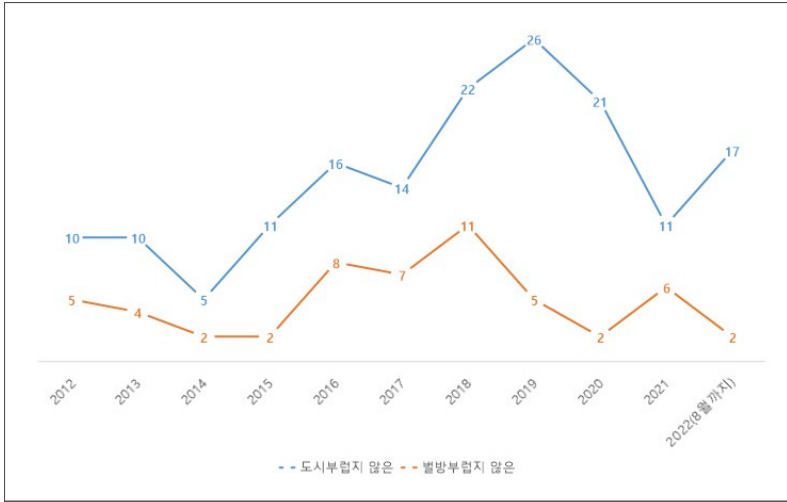
### 1)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 증감의 시간적 양상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현재(2022년 8월)까지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언급된 기사 수의 시계열적 빈도를 살펴보면,<sup>58/</sup> <그림 III-11>에서 보듯이, 집권 초기에는 기사 수가 적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나타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는 2012년의 3배에 달하는 기사 수가 확인된다.<sup>59/</sup>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살피기에 앞서 이 표현이 출현하기 이전에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온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이 포함된 기사 수의 시계열적 빈도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위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58/ 그래프에 반영된 기사 수의 계산은 기사 한건에 “도시부럽지 않은”이 여러 번 언급되더라도 한 번 언급된 것과 동일한 기사 1건으로 간주했다. 유사 표현들(예, “도시아이들 부럽지 않은”)이 들어간 기사들도 기사 1건으로 계산했다.

59/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2년 차에 들어간 2021년은 방역 보도가 중심이 되면서 도시개발 관련 보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도시 부럽지 않은 언급 기사 수도 급감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농촌 살림집 건설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도시 부럽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기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림 III-11** 노동신문(2012~2022)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별방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기사 수



출처: 필자 작성.

경사도가 가파른 산지지형의 특성상 논농사가 어려운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논농사 중심의 별방은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풍족한 지역으로 인식해 온 비교 대상이었다.<sup>60/</sup>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언급된 기사 수에 비해 별방을 언급한 기사 수는 확연히 줄어든다. 다만 <그림 III-11>에서 보듯이, 언급 횟수는 적지만

60/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기의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의 증가세 분석까지는 하지 못했다. 다만 도시와 대립되는 공간이 산간과 별방을 포함하는 촌락인 반면에 별방의 대립되는 공간은 산간이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별방과 산간의 대립구도는 도시와 촌락 대립구도의 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 당국도 이러한 별방과 산간의 차이는 자연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간주하고, 통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까지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별방의 생산량과 산간의 생산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두 공간 간의 불균등발전 양상은 존재하겠지만, 별방과 산간 모두 도시를 위한 식량기지 역할이 부여된 촌락으로서 도시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불균등발전이 보다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은 도시와 촌락(별방+산간)의 대립구도가 전제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과 동격으로 보긴 힘들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도시와 유사한 상승 패턴을 나타냈는데, 이는 “눈물 속에 살아오던 창성사람들 도시부럽지 않게, 별방부럽지 않게 살도록 하려고”(노동신문 2013.9.8.), “오늘은 별방도시 부럽지 않은 고장으로 전변”(노동신문 2016.7.3.), “도시나 별방학교 부럽지 않은 현대적이면서도 아담한 새 교사”(노동신문 2017.1.5.), “도시나 별방아이들 부럽지 않게”(노동신문 2018.11.12.)처럼 주로 산간지역 주민들의 발언에서 도시와 별방을 함께 언급하면서 유사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패턴은 유지되지 않고, 별방의 언급횟수는 확연히 감소된다.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가 2년차에 접어든 2021년에는 건설활동이 줄어들면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급감했지만,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 채택된 2022년부터는 농촌 살림집 건설이 증가하는 것에 조용하여 해당 표현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은 “도시부럽지 않은”과 달리 증가세가 미미한데, 이는 산간지대 주민들에게 별방이 더는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도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러움의 대상을 표현한 “도시부럽지 않은”은 북한 매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도시부럽지 않게 꾸려진 목욕탕과 이발실, 식당, 광부들의 휴게실, 탁구장은 물론 목욕탕의 폐열을 이용하는 건조실까지 훌륭히 꾸려져 있다”(노동신문 2016.8.12.)

“도시부럽지 않은 체육관, 은덕원, 문화회관, 미래원 등이 일떠서고 군소재지 도로가 번듯하게 포장되었으며”(노동신문 2016.8.31.)



“도시부럽지 않은”은 표면적으로는 부럽지 않은 것으로 읽히지만, 역설적으로 부러움을 촉발한 도시를 호명함으로써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다.<sup>61/</sup> 위에 인용된 기사는 도시에 비하여 촌락 지역의 열악하고 부족한 시설들(목욕탕, 체육관 등)을 개선내지 신축하여 비록 도시 거주민들이 누리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저발전된 촌락이 발전된 도시의 삶에 가까워지게 된 것에 만족해하는 주민들의 내적 타협 내지 절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러움의 대상인 도시가 발전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를 접할수록 북한주민들의 부러움 수준은 더욱 고양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 착공된 평양의 창전거리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에 완공된 것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려명거리(2017년) 등을 잇달아 건설하면서 화려한 색깔과 디자인의 초고층 건물들로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바뀌었고, 외신에서는 뉴욕의 맨해튼을 닮은 평해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선대와 차별화된 도시개발을 선보였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대규모 도시경관은 새로이 등극한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홍민 2017), 동시에 그러한 스펙터클을 목도한 지방의 북한주민들에게는 그곳에 살고 싶다는 부러움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초고층아파트들과 함께 봉사망까지 새로 건설되면 이 일대의 면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 텔레비

61/ 남북한 간에 부럽다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가령, 한국의 가수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2022)에서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라는 가사는 실은 매우 부러워하는 상태를 잘 보여준다.

존으로 보니 뉘니뉘니해도 부엌이 널찍하고 환한 것이 제일 부럽더라는 여인들의 속삭임 소리가 울린다”(노동신문 2013.10.1.)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3년에 게재된 위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부엌이 널찍하고 환한 것”)을 매개로 주민들의 욕망(“제일 부럽더라”)을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흥미롭게도 이 기사의 제목이 “초고층아파트아래서 흐르는 민심”인 점은 아파트를 통해 표출되는 주민들의 ‘욕망’을 ‘민심’으로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이러한 주민들의 욕망 표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사에서 주목할 지점은 TV,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가 촌락/지방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이다.<sup>63/</sup>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평양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된 대규모 도시개발을 미디어를 통해 목도한 북한주민들에게 부러움의 감정과 자신이 살아가는 저발전된 지역에 대한 부끄러움의 감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서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새로운 살림집이 조성된 검덕지구에 입주하게 된 한 주민은 “TV 화면을 통해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이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졌다. ... 도시부럽지 않은 멋진 새집을 마련해주신 ...”(노동신문 2022.1.1.)

---

62/ 당시 촌락뿐만 아니라 평양 이외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아파트를 매개한 욕망의 표현이 확인된다. 예컨대, 창전거리를 방문한 한 소년은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멋진 아파트들을 많이 일떠세워 온 세상에 자랑하겠어”(노동신문 2012.6.4.) 라고 발언했다.

63/ 북한 통계국이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2017년에 발표한 다중지표군집조사(MICS)에 따르면 북한 TV 보급률은 평양은 100%, 가장 적은 지역은 자강도로 96.4%이다(UNICEF·DPRK 2018, 31). 이 조사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고, 북한통계의 근본적 신뢰도 문제, 보급률이 높더라도 전기공급의 제약으로 인한 TV 시청 가능시간의 지역별 차이 등의 한계가 있지만, TV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도 미디어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라 말하면서 평소 도시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른 기사에서는 한 광산지역 거주자가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으로 소개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민 모범적인 단위”를 소개하는 기사들을 접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거주지는 “자랑거리가 많지 못하다”(노동신문 2016.8.12.)며 부끄러움을 드러냈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미디어로부터 도시부럽지 않은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sup>64</sup>고 밝힌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발전된 도시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은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출현과 확산은 온전히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의지로서만 추동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모든 인민이 평등한 사회를 표방한 북한에서 도시와 촌락의 경계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동일한 “우리”를 앞세우는 북한 체제에서 “우리” 내부의 균열을 전제하는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나온 것은 당의 의도와 이 표현의 출현이 무관한 우발적 현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의도가 섬세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서 확인했듯이, 그동안 노동신문에서 자신의 체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유사 표현인 “남부럽지 않은”을 사용했음을 감안하면 언급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에 대한 주목의 필요성을 축소할 수 없다. 노동신문이 “대내외 모두에 공개되는 텍스트로 당의 공식 입장과 정제된 대외 보도 태도”(홍민 외 2021, 6)를 견지하려는 매체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신문에서 개인의 심리와 욕망이 담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당

64/ “TV와 신문을 통해 날마다 변모되는 영진리의 모습이 소개될 때면 저도 모르게 어께가 으쓱해”(노동신문 2022.7.13.).

의 지배 이데올로기(가령, 인민대중제일주의)나 선전구호에 비해 언급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분석의 초점은 김정은 집권 시기에 북한 당국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사용을 허용내지 조장한 의도가 무엇인지로 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인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불균등발전 상황을 숨기거나 부인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고, 이 상황에 대한 당의 책임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북한 당국이 자신을 대신하여 북한 주민의 ‘입’을 통해 불균등발전의 산물인 도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발화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촌락 지역의 저발전 원인을 촌락의 고유한 공간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묘사하는 서사와도 결합된다.

“우리가 농촌에서 산다고 하여 대충 살아가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여도 우리 생활은 언제 가도 문명해질 수 없고 또 우리의 자식들은 그런 부모들에게서 무엇을 본받고 따라 배우겠소?”(노동신문 2015.2.22.)

“산골이라고 외모까지 도시사람들에게 짝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사람들을 도시사람들 부럽지 않게 내세울 수 있겠는가 ... 산골사람들은 한뼘 외모에서도 도시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인가”(노동신문 2016.1.25.)

위 기사들에서는 촌락의 저 발전을 거주민들의 습성<sup>65/</sup>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거나 심지어 도시와 촌락 사람들의 외모 차이를 우등

---

65/ 촌락이 아닌 도시에만 거주했던 최고 지도자들의 눈에 촌락에 거주하는 인민들은 “의식 속에 낡은 사상 잔재”(김일성),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김정은)을 갖고 있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황진태 2023b, 120).

과 열등으로 나누는 인식마저 확인된다. 이처럼 촌락의 저발전 원인을 온전히 촌락 주민들에게 귀속시키는 서사구조는 현재의 지역 간 불균등발전 상황에 당국이 영향을 준 측면은 비가시화한다.

둘째, 대북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의 장기화로 중앙이 각 지역의 불균등발전을 해결할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불균등 문제에 앞장서게끔 유도하는 통치술의 의도가 확인된다.

“얼마 전까지 낡은 단층건물이었던 그 학교가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현대적 건축미를 뽐내는 2층짜리 교사 두동과 체육관, 수영장을 갖춘 멋쟁이학교로, 태양에너르기에 의한 전력보장체계까지 갖추어진 도시부럽지 않은 학교로 전변된 현실은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으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음을 웅변으로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노동신문 2016.12.28.)

“봄부터 가을까지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지는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농장자체의 힘으로 덩치 큰 교사건설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각오와 열정으로는 어렵도 없었다. 하지만 후대들을 위한 일을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긴 이곳 일군들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학교를 지을 바에는 도시학교 부럽지 않게 지어주자!”(노동신문 2017.7.23.)

즉, 중앙의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의 불균등발전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자력자강”, “자력갱생”이라는 추상적 구호들을 지역에서 인력, 자원을 최대한 동원(“농장자체의 힘”)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유도한 것이다. 앞서 첫 번째 의도인 저발전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는 서사마저 결합한다면 중앙의 지원 없이 오로지 지역의 인력과 자원 총동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만 표출이나 저항의 가능성은 낮아진다.<sup>66/</sup>

집권 초기에 통치능력을 보여줄 정책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된 대규모 도시개발은 새로운 통치자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효과적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양 중심의 도시개발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촌락의 격차를 심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균등발전 문제를 잉태했다. 더구나 미디어를 통한 발전된 도시 이미지의 전국적인 확산은 그러한 공간으로부터 소외된 지방주민들의 부러움과 거주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황은 불균등발전애 직면한 북한 당국 으로서는 문제의 원인인 발전된 도시에 대한 저발전 지역 주민들의 욕망 가시화를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도 그러한 욕망이 형성된 주민 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직면한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통치의 논리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다.

## 2)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 증감의 공간적 양상

앞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담긴 기사들의 시간적 추이에 집중했다면, 다음으로는 그러한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과 연동된 지역들을 언급한 기사 수의 변화를 살펴으로써 공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66/ 한 북한전문매체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게 채소 공급을 목적으로 세워진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이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노동력 및 자원이 상당히 동원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NK 2022.3.4.).

표 III-7 노동신문(2012~2022)에서 “도시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기사의 지역별 분류 및 기사 수

|      | 평양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황해북도 | 황해남도 | 자강도 | 양강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강원도 |
|------|----|------|------|------|------|-----|-----|------|------|-----|
| 2012 |    | 3    | 1    | 2    |      | 3   |     | 1    |      | 1   |
| 2013 |    | 3    | 1    | 1    |      |     |     |      |      |     |
| 2014 |    |      |      |      | 1    | 1   | 1   |      |      |     |
| 2015 | 4  | 1    | 1    | 1    |      | 2   | 1   |      |      |     |
| 2016 | 1  | 2    | 4    | 5    |      | 2   | 1   | 2    |      |     |
| 2017 | 1  | 2    | 2    |      | 1    | 1   | 1   | 2    | 2    |     |
| 2018 | 2  | 2    | 3    | 1    | 1    | 3   |     | 2    | 3    | 4   |
| 2019 | 4  | 4    | 1    | 1    | 1    |     | 1   | 1    | 11   | 2   |
| 2020 | 1  | 2    | 2    | 5    |      | 3   | 6   | 5    | 6    | 5   |
| 2021 | 1  | 1    | 1    |      | 1    | 2   | 1   | 3    | 2    |     |
| 2022 | 2  | 2    | 5    |      | 2    |     |     | 3    | 3    |     |
| 총계   | 16 | 22   | 21   | 16   | 7    | 17  | 12  | 19   | 27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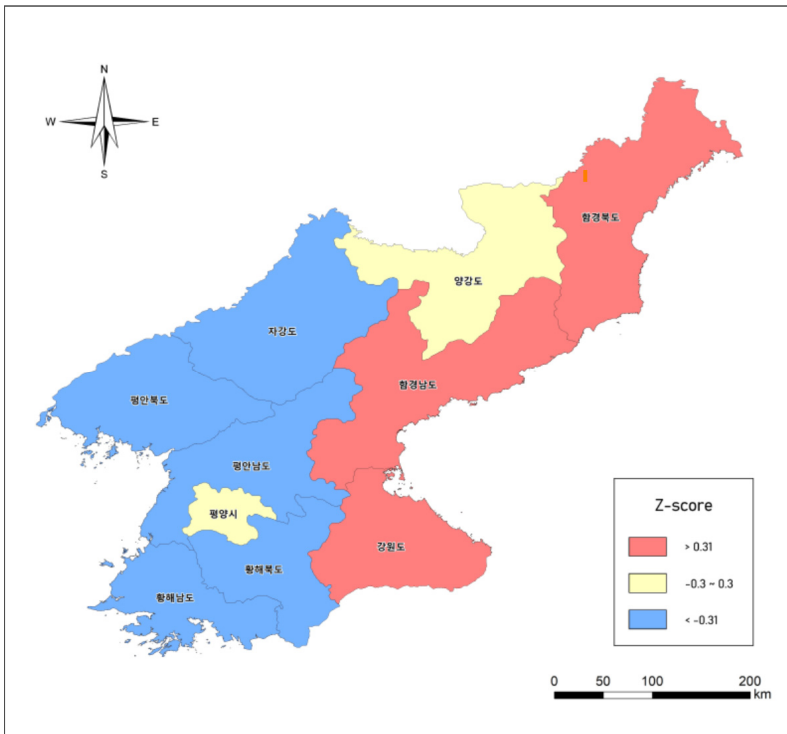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우선 “도시부럽지 않은” 언급 기사들에서 나타난 지역명을 수도 평양과 9개 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만들었다(<표 III-7>). 지역별 기사 수의 1개년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고 편차가 크게 나타나 김정은 집권 기간의 전체적 추이나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워 5년 단위(전반기/후반기)로 나누었다. 데이터는 표준화(standardization) 방식을 사용했다.<sup>67/</sup> 전반기 데이터와 후반기 데이터는 그 값(전반기 연도별 평균 4.6개/후반기 연도별 평균 10.6개)에서 큰 차이가 있어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화는 데이터 간의 단위 및 특성의 불일치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표준화를

67/ 해당 작업은 서울대 지리교육과 석사 이석민의 도움을 받음.

시행하면 Z값 0(평균)을 기준으로 해당 데이터가 어느 서열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별 언급횟수의 증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증가한 정도의 차이를 포착하는 데 방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그림 Ⅲ-12>에서 파란색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반기에 상대적으로 언급이 많았던 지역을 가리키고, 붉은색 지역은 후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언급이 많았던 지역을 가리킨다. 노란색 지역은 상반기와 후반기를 통틀어 평균적으로 언급된 지역을 가리킨다.

**그림 Ⅲ-12** “도시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지역의 전반기(2012~2016)/후반기(2016~2021) 시계열 변화



출처: 필자 작성.



〈그림 III-12〉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패턴은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김정은 집권 전반기에는 서부 지역이고, 후반기에는 동부지역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반기에는 평안북도,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기사 수가 많았고, 후반기에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기사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한 양상이다. 북한의 지방주민들이 저발전에 대한 불만과 평양과 같은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전반기에 유독 서부지역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증가한 것은 북한 당국이 서부지역을 동부지역보다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나올 계기를 제공할 지역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실제 중앙이 지방에 지원했는지는 별개로) 서부지역에 정책적 관심을 두는 공간선택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선택성은 지역 간의 자연·인문지리적 특성의 차이가 북한 당국의 인식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부는 동부에 비하여 고도와 경사도가 낮다는 점에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은 평지가 많다. 서부지역의 산간지대도 동부지역에 비해 가파르지 않아서 정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으로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평양과 평안남도는 북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동부지역은 몇몇 도시(청진, 함흥 등)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대한민국 국가지도집Ⅲ 2023.5.20. 접속). 또한 북중교역의 60~80%를 차지하는 대표 관문도시인 신의주로부터 유입된 물류의 흐름이 서부지역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위치한 도시들을 관통하면서 부가 축적되었다(홍민 2015; 정은이·이해정 2022).

이들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촌락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도시부럽지 않게 만들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을 지원해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평양 부럽지 않은 지방을 만들기 용이한 조건을 갖춘 서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독려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부지역 주민들로서는 동부에 비해 발전된 도시들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미디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 도시를 방문하거나 방문했던 사람들과 접촉하며 도시부럽지 않은 삶에 대한 욕망이 동부지역 보다 선명하게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북한당국과 서부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 들어가면서 전반기에는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후반기에 동부지역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집중된 원인을 살펴보자. 전반기에는 당의 입장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도시부럽지 않은 지역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쉬운 서부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했지만, 이러한 서부 편중의 공간선택성은 북한이 직면한 불균등발전 양상이 ‘평양 vs. 지방’ 뿐만 아니라 서부에 비하여 인구가 적고 산간지대인 동부지역의 저발전 패턴이 겹치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하반기부터는 서부지역 다음으로 동부지역에 집중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동부지역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증가하는 데는 전반기에 두드러지지 않은 새로운 요인들이 있다. 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직접 언급한 횟수가 증가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은 전반기의 마지막 해인 2016년 8월 평안남도 개천시 1월18일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부터였고, 하반기 들어서는 평양시 강동정밀기계공장 방문(2017년 2월)을 제외하고는 양강도 삼지연군 방문(2017년 12월), 평안북도 신도군

방문(2018년 6월), 함경북도 중평남새온실농장 방문(2019년 7월, 10월), 함경남도 홍원군 태풍 피해지역 방문(2020년 10월) 등 동부 지역을 집중방문하면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 <그림 III-11>에서 2019년에 도시부럽지 않은 기사 수가 정점을 찍은 것도 김정은이 중평남새온실농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삼지연군과 함께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본보기 사업으로서 중요성을 부여하여 후속 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sup>68/</sup>

**그림 III-13** “도시부럽지 않은 농장마을” 제목의 노동신문 기사

|  |  |   |
|--|--|---|
| <p>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p> <p>《사회주의공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흥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입니다.》</p> <p>수백세대의 특색있는 소총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편의봉사시설 등이 즐비하게 들어선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p> <p>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7월 풍소 중평마을을 찾으며 웅대한 남새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밝혀주시면서 종일원들의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건물들을 기본대로에서 보이는 위치에 현대적으로 문명하게 건설할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소총살림집형성안도 풍소 지도하여주시며 주택지구건설과정을 절름걸음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p> <p>그러시고도 지난 10월에는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사회주의농촌문화주택건설의 본보기,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다고</p> | <p>하시면서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군과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p> <p>농장마을을 그야말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하게 꾸려주어야</p>  | <p>대청이 되게 지은것, 창문을 동글게 또는 네모나게 한것을 비롯하여 그 모양도 각이하다. 건물외벽마감도 한가지 마감전재가 아니라 여러가지 색깔의 타일과 외장재를 배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소총살림집 하나하나가 다르게 안겨고 건물들의 다양성이 잘 보장되었다.</p> <p>다른 특징은 건물배치가 집약</p>   |
| <h2 style="margin: 0;">도시부럽지 않은 농장마을</h2>  |  |   |
| <p>한다고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일때운 이곳 주택지구에는 지난 시기의 문화농촌마을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이 있다.</p> <p>우선 건물들의 모양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하였다.</p> <p>모든 건축물이 비반복적이며 개성이 뚜렷하다.</p> <p>50여종의 소총살림집만 보아도 크게 4 가지 형에 20여가지 형태로 건설되었는데 현판이 한개 또는 두개이상인것, 배판다가 앞으로 돌출되었거나 안으로 들어간것 등 여러가지이다.</p> <p>같은 형의 건물이지만 서로</p>   | <p>화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것이다.</p> <p>지난 시기의 농촌마을들은 대체로 같은 모양의 살림집들을 규모있게 뿔을 맞추어 배열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곳 주택지구는 살림집들의 밀집도를 높이면서도 건물배치가 다양하게 되어있다. 각이한 모양새를 가진 크고작은 소총살림집들이 서로 마주서기도 하고 동지있기도 하며 사선으로 잇달아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크지 않은 면적에 수십동의 건물이 들어앉았지만 실지 마을에 들어서면 답답한 감이 없고 시원</p> | <p>한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어느 집에서나 오가는 거리가 일정한게 유치원과 탁아소를 마을 중심에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였다.</p> <p>공원화, 원림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것도 주목할만 하다.</p> <p>공원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지구의 곳곳에 여러가지 운동기구를 갖춘 아이들의 놀이터와 함께 휴식터가 적절히 배치되어있어 농촌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완전히 가져주고 있다.</p> <p>살림집과 공공건물주변에 잔디밭을 조성하고 거기에 수종이 좋은 갖가지 과일나무와 꽃밭을 심었다. 더욱 이색로운것은 목지구역의 여러곳에 있는 이끼가 긴 천연바위이다.</p> <p>끝없이 세경을 삼조하며 혁신해나가고도록 이끌어주는 당의 손길아래 건축미학적인 조려서에서 나무태에 없이 건설된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은 날로 더욱 개발정진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패밀을 그려보게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기자 리철민</p> |

출처: 노동신문 2019.12.6. 2면/뉴스 1.

전반기 기사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은 주로 본문에서 언급되고, 단어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소제목으로 수록되는 정도였다. 그런

68/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군과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마을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노동신문 2019.10.18.).

데 김정은이 중평남새온실농장을 강조한 이후부터 노동신문에서는 <그림 III-13>과 같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제목으로 전면에서 제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최고지도자 입에서 발화되고 기사 배치에서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전반기와 비교하여 북한 당국이 불균등발전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변화된 인식에 조응하여 저발전 지역주민들의 욕망이 담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에 대한 미디어 노출의 허용 폭이 더욱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3. 소결

III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을 진지전 도시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김일성 정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분산된 도시 형태는 김정은 정권의 도시화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진지전 도시화는 각 도시의 개별적 고립이 아닌 도시 간 연결성을 강조했지만, 김정은 정권에서는 선대에 구축된 도로교통 인프라를 현상유지 혹은 투자중지를 취하고는 대신에 군비증강에 재원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존 평양 중심의 도로교통 인프라와도 연관되어 발생한 오늘날 평양-서부지역 중심의 불균등발전은 최근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했을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중앙의 지원이 아닌 자력갱생의 이름으로 지방에 책임을 돌리면서 북한 당국은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 진지전 도시화는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것을 계기로 외부의 적과 유사시를 대비할 목적이 주요했다면, 김정은 정권에서 진지전 도시화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체제경쟁 속에 누적된 지방의 북한주민들(북한 당국에는 잠재적인 내부의 적)의 불만도 억눌러야 한다는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에 맞서 지역 간 정치적 결사를 취하려는 주민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현재의 도시 간 연결성이 떨어지는 진지전 도시화 형태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 밖 북한주민들이 평양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자신의 힘으로 작은 진지를 평양처럼 만듦으로써 충족할 것을 유도하는 담론전략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불만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군비경쟁이 지속되면서 정권의 재원이 지역에 투입되지 않고 지역에서 자력갱생의 노력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자각하는 북한주민들이 급증하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현재의 진지전 도시화 형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방식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을 설명하기 위하여 진지전 도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진지전 도시화 개념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개별적인 도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북한도시연구가 자칫 도시를 형성하는 도시안팎의 다양한 요인, 관계, 의도, 전략을 간과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도시주의적 성찰로부터 비롯됐다. 최근 도시연구에서 주목받는 이론인 도시에 대한 내부적·영역적 이해를 넘어서 보다 관계적으로 도시를 이해하려는 행성적 도시화론과 “평해튼”으로 상징되는 북한 도시공간의 형태적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시장화라는 단일 논리에 착목하면서 주목하지 못한 북한의 구조적인 대외관계 긴장으로 초래된 군사적·지정학적 측면의 논리와 전략이 도시공간과 접목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지정학 논의를 참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지전 도시화의 개념화를 시도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개념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1) 분산된 도시 간 구성에 대한 선대와 김정은 정권 간의 유사성과 차이의 비교, 2) 도로망을 사례로 도시 간 연결 인프라의 불균등한 발전 양상(기존 도로망의 전반적 낙후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평양 중심의 교통 인프라 현상유지), 3) 진지전 도시화를 정당화하는 담론의 역할(지정학적 대립의 장으로서 평양을 틀 짓기,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출현)로 나누어 개

념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학술적 기대효과는 앞으로 북한도시연구가 개별화된 도시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도시 간 관계에 대한 관계적, 역사적, 공간적 분석에도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을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함의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김정은 집권 십 년이 지나는 동안 축적된 북한도시연구는 ‘부드러운(soft)’ 문화연구의 색채가 짙었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발굴된 소비계층, 소비공간, 시장화, 취향과 같은 흥미로운 화두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하는 북한사회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조성했던 2018년 잠깐의 ‘한반도의 봄’을 제외하고는 김정은 집권 십 년을 펼쳐서 본다면, 지속적인 핵·미사일 실험과 대북제재의 반복 속에서 악화된 대외관계가 지속되는 한반도의 겨울이 더 길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지속이 북한의 도시공간에 미친 영향과 대외관계와 도시공간 간의 특정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지전 도시화 개념은 북한도시의 다른 측면, 지금까지 덜 주목했던 논리, 전략들을 발굴함으로써 보다 다면적으로 북한도시공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김정은 정권 분석에도 직접 연결된다. 가령,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도 핵무기 발사 수단을 다중·다양화하는 배경에는 탄도미사일을 운반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도로망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진지전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북한이 전략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게 막는 열악한 도

로 인프라는 진지전 도시화의 역설로 확인된다. 김일성 집권시기부터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대외적 긴장 속에 체제내구력을 유지해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분산된 도시 간 구조와 자력갱생 정책으로 구성된 진지전 도시화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겠지만, 그들이 핵심적으로 고수해온 군사 및 안보 우선의 정책방향과 그에 조응한 공간계획이 오늘날에 들어서 그들이 목표한 무기체계의 발전과 상충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도시 관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북한학계의 여러 전공자(정치학, 군사학 등)와 함께 학제적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제이다.

앞으로 김정은 스타일의 진지전 도시화가 지속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이롭지 않다. 북한주민들에게 자력갱생만 요구하는 북한 당국의 처사는 자칫 주민들이 정권에 반발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거나 더욱 상황이 악화되면서 급변사태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본문에서 확인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사용을 북한 당국이 용인했다는 데서는 주민 통치 의도가 주요하지만, 저간에는 더 이상 주민의 욕망을 외면할 수 없다는 북한 당국의 고민도 확인된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욕망이 과거보다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면, 역대 정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지역 불균등발전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의 모든 이가 겪은 배고픔이라는 생물학적 욕구보다 저발전 지역의 주민들이 충족하려는 욕구가 상위에 있다(인정욕구, 문화적 욕구,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는 점에서 북한 당국에 보다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급변사태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는 한국으로 대규모 난민 유입, 북한군부의 예상치 못한 군사도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우리 사회에도 이롭지 않다. 여기서 남북한 대립으로 빚어진 진지전 도시화의 공간적 특성을 역

설적으로 남북한 교류로 유도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진지전 도시화에 따라 북한도시들은 도시 간 연결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부 간 대화방식만을 고수하기보다 도시 차원의 남북교류를 시도하여 북한의 저발전된 특정 도시의 사회발전에 한국의 도시정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고립화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도시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가령, 한국 측 인사가 들어온 한국문화 콘텐츠가 인근 도시로 전파될 가능성 등)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이미 유사한 경험을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공동운영에서 학습했다. 특히, 북한이 2021년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SDGs 담론은 SDGs를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로부터 도시 및 지역 단위로 내려가는 ‘SDGs의 지역화(localization)’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 도시가 전면에서 나서는 게 북한에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면, 북한이 준수하고자 하는 SDGs를 매개로 여러 참여자 중 하나로 혹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한국 도시정부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황진태·백일순 2021, 45-46).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2018년 ‘한반도의 봄’ 시기에 평양의 오수정화장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서울시의 지원에 기대를 표출한 바 있다는 점은 남북한 도시 간 교류가 전혀 불가능한 정책방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권이 지향하는 탄소중립정책을 구현한 북한식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다.

끝으로 미래 남북한 교류가 재개될 때를 대비하여 진지전 도시화의 연구범위는 북한도시에서 ‘남하’하여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립이라는 동일한 조건의 영향을 받아온 한국의 도시화를 설명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즉, 비교도시론(comparative urbanism)(황진태 2022) 측면에서 ‘남북한 진지전 도시화’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미래의 후속연구가 보다 원활히 진행되려면 진지전 도시화 개념을 처음 제안한 본 연구의 이론작업과 사례분석이 보다 정교하고 엄밀하게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연구자 개인 사정으로 본래 정해진 연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발간된 본고는 처음 계획했던 완성도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온전히 필자의 책임이다. 앞으로 진지전 도시화 후속연구를 지속함으로써 미완의 연구에 대한 부채를 조금이나마 털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3.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
- 고상진·전도명. 1989.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국가안보실. 2023.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 김갑식·전병곤·정성윤·박주화·황수환·김상범·김선혁·신영환·오일석·이기동·이남주·이승주·이왕휘·이정환·장세호·전재성. 2022.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김병로. 1999.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 김 원. 1998.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 김진하·박영자·홍제환·박형중·전성훈·이 석·정성철. 20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미셸 푸코·이상길 옮김. 2014.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박영자·박형중·현승수·정은미·황진태·황태연·김화순·홍찬숙·김신규·최은주·명수정·박민주·최선경·박치현·조은성. 2022.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서울: 통일연구원.
- 서재진. 2004.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 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 안병민. 2014.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이강언·강석훈·김정기·오윤숙·전태일. 2009. 『최신 군사용어사전』. 서울: 양서각.

- 임동우. 2011.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평양 도시 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953-2011』. 파주: 효형출판.
- 장철운·이무철·이수형·양정학·공민석·김규철·조운영.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준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 정은미·박소혜·이종민. 2022. 『북한의 중산층』. 서울: 통일연구원.
- 정은이·임수호·정승호·이승엽·김혁. 2019.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정은이·이해정. 2022.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조정아·최은영. 2017.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 최완규 엮음. 2004.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해산』. 한울아카데미.
- 최지영·박희진·윤보영·한승대·한재현. 2021.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한동호·김수경·이경화.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서울: 통일연구원.
- 황진태·백일순. 2021.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 2015.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17.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오경섭·정은이·한기범·양문수·차문석·전영선·김보근·박희진·최은주. 2018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박철현·안병민·원동욱·이영훈·임동우. 2019.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최지영·이재영·강채연·김태균·양문수·차문석·홍덕화·황규성·황진태. 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강채연·박소혜·권주현. 2021.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차문석·김혁. 2022.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 홍민·김진하·박영자·홍제환·정은미·황진태·김혁. 2023. 『북한 주요 도시 경제 인프라 지도』. 세종: 기획재정부·서울: 통일연구원.
- 홍제환. 2023. 『북한경제』. 서울: 해남.
- 홍제환·김석진·최지영·김수경. 2020.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세종: 기획재정부.
- Coe, Neil, Philip Kelly, Henry Yeung. 2019. *Economic Geography: A Contemporary Introduction*. Oxford: Wiley-Blackwell.
-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 논문

- 고유환. 2015. “북한연구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조영주 편저. 『북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27-53. 파주: 한올아카데미.
- 구갑우·최봉대. 2004.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155-196. 파주: 한올아카데미.
- 김경남. 2012. “한말 일제의 진해만 요새 건설과 식민도시 개발의 변형.” 『향도부산』 28: 1-51.



- 김민아·정인하. 2019. “평양 광복거리 신도시의 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주택 소구역 계획에서 거리 형성계획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5(10): 91-102.
- 김용현·한승대. 2016. “‘고난의 행군기’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7(2): 253-274.
- 김윤미. 2016. “일본군의 군사수송과 한반도 해안요새.” 『역사와 실학』 59: 135-164.
- 김태윤. 2022.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연구(1937-1960)』.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23. “북한의 조립식 건축의 도입과 ‘평양속도’의 탄생.” 『동방학지』 203: 29-61.
- 박배균. 2017. “동아시아에서 국가의 영토성과 예외적 공간: 동아시아 특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2): 288-310.
- 박성열·이은정·이정요·한지만. 2021. “북한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 선행연구 분석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7(1): 129-162.
- 박소혜. 2023. “김정은 시기 도시건설 담론으로 본 북한의 통치전략.” 『통일정책연구』 32(1): 175-196.
- 박형중. 2022. “정치안보 환경과 주민생활.” 박영자 편저.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371-393. 서울: 통일연구원.
- 박휘락. 2014. “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5(5): 81-106.
- 박희진. 2020. “북한 도시-농촌의 연결공간과 파생되는 계층들.” 『문화와 정치』 7(3): 211-241.
- 안진희·심지수. 2023. “북한 김정은 시대의 평양, 평해튼, 그리고 평해 트니즘.” 『통일정책연구』 32(1): 197-221.
- 양문수. 2004. “지방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 『비교경제연구』 11(2): 1-44.
- 유지아. 2022. “일본의 총력전 체제와 조선에 대한 방공 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43: 5-41.
- 윤세라. 2021. “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5(2): 7-40.
- 이종구. 2010. “총력전 체제와 기업공동체의 재편.” 『일본비평』 2: 88-131.
- 임수진. 2023.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3(1): 9-38.
- 정은이. 2015.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7(1): 289-328.
- \_\_\_\_\_. 2018. “북한 부동산 가치변화와 개발에 관한 연구: 평양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30(4): 1-30.
- 조기형. 2017.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핵 민방위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 2: 71-102.
- 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 지정학.” 『공간과 사회』 31: 160-199.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16.
- \_\_\_\_\_. 2018a.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선 융복합 연구를 위한 시론(I).” 『대한지리학회지』 53(3): 283-303.
- \_\_\_\_\_. 2018b. “발전주의 국가 한국의 가임여성 통치전략에 대한 페미니스트 역사지리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30(1): 78-96.
- \_\_\_\_\_. 2019.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관한 시론: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4): 118-156.
- \_\_\_\_\_. 2020a.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 『공간과

- 사회』 30(1): 124-166.
- \_\_\_\_\_. 2020b. “도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320-349.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22. “비교도시론이 북한도시연구에 주는 함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1): 21-40.
- \_\_\_\_\_. 2023a.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의 출현?: 북한도시연구에 내재된 도시-촌락의 이분법을 적출하기.” 『아시아리뷰』 13(1): 99-136.
- \_\_\_\_\_. 2023b.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신의주의 도시공간 변화와 북중관계 전망: 도시지정학의 시각에서.” 『공간과 사회』 33(3): 217-250.
- 허은. 2010. “20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지주의.” 『한국사연구』 150: 227-269.
- Agnew, John. 1994. “The Territorial Trap: The Geographic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 53-80.
- Angelo, Hillary, and David Wachsmuth. 2015. “Urbanizing Urban Political Ecology: A Critique of Methodological City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9(1): 16-27.
- Arboleda, Martin. 2016. “Spaces of Extraction, Metropolitan Explosions: Planetary Urbanization and the Commodity Boom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0(1): 96-112.
- Brenner, Neil. 2013. “Theses on Urbanization.” *Public Culture* 25(1): 85-114.
- Collier, Stephen J., and Andrew Lakoff. 2008. “Distributed Preparedness: The Spatial Logic of Domestic Security in

-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1): 7–28.
- Dalakoglou, Dimitris. 2012. “‘The Road from Capitalism to Capitalism’: Infrastructures of (Post) Socialism in Albania.” *Mobilities* 7(4): 571–586.
- Egan, Daniel. 2014. “Rethinking war of maneuver/war of position: Gramsci and the military metaphor.” *Critical Sociology* 40(4): 521–538.
- Farish, Matthew. 2003. “Disaster and Decentralization: American Cities and the Cold War.” *cultural geographies* 10(2): 125–148.
- Galindez, Kyle. 2023. “Planetary Urbanization and Imperialism: A View from Guhan/Gua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7(1): 5–21.
- Graham, Stephen. 2004. “Postmortem City: Towards an Urban Geopolitics.” *City* 8(2): 165–196.
- Hewitt, Kenneth. 1983. “Place Annihilation: Area Bombing and the Fate of Urban Plac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3(2): 257–284.
- Hwang, Jin-Tae. 2016. “Escaping the Territorially Trapp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8(4): 554–560.
- \_\_\_\_\_. 2021. “The Future is How: Urbanising the Korean Peninsula for Imagining Post-fossil Cities in East Asia.” *The Geographical Journal* 187(1): 64–68.
- Light, Jennifer. 2002. “Urban Security from Warfare to Welfar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3): 607–613.

- Murray, Pearse, and Ivan Szelenyi. 1984. "The City in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8(1): 90-107.
- Pandey, Bhartendu, P. K. Joshi, and Karen C. Seto. 2013. "Monitoring Urbanization Dynamics in India using DMSP/OLS Night Time Lights and SPOT-VGT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arth Observation and Geoinformation* 23: 49-61.
- Park, Bae-Gyoon. 2005. "Spatially Selective Liberalization and Graduated Sovereignty: Politics of Neo-liberalism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Political Geography* 24(7): 850-873.

### 3. 북한자료

- 김일성. 1980.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3년 8월 5일." 『김일성 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1.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양시건설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12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a.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일." 『김일성 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b.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지방당및경제일군 창성련석 회의에서 한 결론 1962년 8월 8일." 『김일성 저작집 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c.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내무성 및 도시경영성 일군협의회에서 1964년 2월 10일." 『김일성 저작집 18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d. “산과 강을 잘 리용하자: 자강도 도, 시, 군당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4년 5월 2일.” 『김일성 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e. “평안남도의 10대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64년 8월 6일.” 『김일성 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f. “중심군당위원회의 과업에 대하여: 중심군당위원장들앞에서 한 연설 1963년 4월 27일.” 『김일성 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 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5.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국공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7일.” 『김일성 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a. “남포시를 항구문화도시로 잘 꾸리자: 남포시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2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3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b. “남포시앞에 나서는 몇가지 당면과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남포시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0년 3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0. “남포갑문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남포갑문건설관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5월 22일.” 『김일성 저작집 3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농촌 테제의 실현을 위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 담화 1968년 2월 2일.” 『김정일 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8.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국토관리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11월 19일.” 『김정일 선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9a.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1964년 3월 18일.” 『김정일 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9b. “륙해운사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자 1968년 7월 19일.” 『김정일 선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12.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1월 14일.” 『김정일 선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13. “청년영웅도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다: 청년영웅도로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89(2000)년 11월 13일.” 『김정일 선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준기·리충관·오무일. 1991. 『조선교통운수사 3(자동차운수편)』. 평양: 공업종합출판사.
- 『로동신문』. 1963. “금년에 폭발물 사고로만도 1천 500여 명이 사상.” 1963.3.10.
- \_\_\_\_\_. 1964. “무시로 생명을 앗아가는 미국제 폭발물.” 1964.3.10.
- \_\_\_\_\_. 1972. “고속도로 몇 개 해놓았다고 근대화가 되는거냐.” 1972.7.21.
- \_\_\_\_\_. 1973. “남조선의 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 1973.1.17.
- \_\_\_\_\_. 1978. “미제가 전선중부지역에서 폭격연습: 고속도로에서 전투폭격기들의 긴급리착륙훈련을 감행.” 1978.3.16.
- \_\_\_\_\_. 1989. “원산-금강산사이 고속도로도 건설공사 완공.” 1989.6.8.

- \_\_\_\_\_. 1989. “관광지의 특성에 맞게 건설된 원산-금강산사이 고속도로.” 1989.6.24.
- \_\_\_\_\_. 1999.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은 여러 면에서 의의가 큰 기념비적 건설입니다. 김정일.” 1999.6.30.
- \_\_\_\_\_. 1999. “고속도로건설에 깃든 숭고한 애국의 뜻(1).” 1999.7.19.
- \_\_\_\_\_. 2000. “고속도로건설 힘있게 지원: 평양시에서.” 2000.1.21.
- \_\_\_\_\_. 2000. “고속도로건설을 성의껏 지원: 황해남도에서.” 2000.2.26.
- \_\_\_\_\_. 2000. “평양-남포고속도로포장 시작.” 2000.5.3.
- \_\_\_\_\_. 2000. “포장단계에 들어 간 평양-남포고속도로.” 2000.6.1.
- \_\_\_\_\_. 2000. “고속도로주변에 새 마을들이 일떠선다: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에서.” 2000.6.22.
- \_\_\_\_\_. 2000. “평양-남포고속도로포장 완공단계: 조선인민경비대 신일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2000.9.22.
- \_\_\_\_\_. 20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남포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함에 대하여.” 2000.10.12.
- \_\_\_\_\_. 2000. “얼마나 희한한가 세계적인 고속도로.” 2000.11.16.
- \_\_\_\_\_. 2012. “커지는 꿈, 높아지는 리상: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에서.” 2012.6.4.
- \_\_\_\_\_. 2013.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수많은 폭발물 발견.” 2013.5.9.
- \_\_\_\_\_. 2013.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영광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2013.9.8.
- \_\_\_\_\_. 2013. “초고층아파트아래서 흐르는 민심.” 2013.10.1.
- \_\_\_\_\_. 2015.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선구자: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정주시 일해협동농장 제2작업반 반장 김영남동무.” 2015.2.22.
- \_\_\_\_\_. 2016. “인민의 사랑받는 공훈리발사.” 2016.1.25.
- \_\_\_\_\_. 2016.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대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



- 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 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또 하나의 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2016.3.18.
- \_\_\_\_\_. 2016. “아버이 그 사랑 길이 전하며 날로 흥하는 두메산촌: 고풍군을 찾아서.” 2016.7.3.
- \_\_\_\_\_. 2016. “우리의 일터를 사랑합니다: 구성철도광산 일군들과 종업원들.” 2016.8.12.
- \_\_\_\_\_. 2016. “혁명사적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장진군당위원회에서.” 2016.8.31.
- \_\_\_\_\_. 2016. “본보기창조열풍과 더불어 비약하는 주체교육.” 2016.12.28.
- \_\_\_\_\_. 2017. “새 학교의 류다른 운동회: 무산군 주초소학교에서.” 2017.1.5.
- \_\_\_\_\_. 2017.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2017.4.14.
- \_\_\_\_\_. 2017. “우리 당의 후대사랑 넘치는 고장: 재령군 래림고급중학교를 돌아보고.” 2017.7.23.
- \_\_\_\_\_. 2018. “미제의 폭발물 새로 발견.” 2018.5.10.
- \_\_\_\_\_. 2018. “두메산골의 체육열풍: 랑림청년광산에서.” 2018.11.12.
- \_\_\_\_\_. 2019.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도하시였다.” 2019.10.18.
- \_\_\_\_\_. 2019. “도시부럽지 않은 농장마을.” 2019.12.6.
- \_\_\_\_\_. 2021.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열의: 립업부문에서.” 2021.3.30a.
- \_\_\_\_\_. 2021. “철강재보장이자 공사속도라는 자각 안고: 금속공업부문에서.” 2021.3.30b.
- \_\_\_\_\_. 2021. “필요한 물들을 제때에 신속히: 철도운수부문에서.” 2021.3.30.c.

- \_\_\_\_\_. 2021. “인민의 리상거리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선진화들 새로 장착.” 2021.4.6.
- \_\_\_\_\_. 2022. “산악협곡도시에 펼쳐진 사회주의 새 선경.” 2022.1.1.
- \_\_\_\_\_. 2022.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개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강습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2022.2.9.
- \_\_\_\_\_. 2022.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온다.” 2022.2.24.
- \_\_\_\_\_. 2022. “강계-만포도로개건공사를 다그친다: 자강도에서.” 2022.5.28.
- \_\_\_\_\_. 2022. “도로기술개건을 중시하고.” 2022.6.30.
- \_\_\_\_\_. 2022. “늘어나는 축산자랑, 풍족해지는 농장살림.” 2022.7.13.
- \_\_\_\_\_. 2022. “회양-김화도로 기술개건공간 적극 추진.” 2022.10.5.
- \_\_\_\_\_. 2022. “도로의 안정성과 견고성보장에 모를 박고.” 2022.11.13.
- \_\_\_\_\_. 2023. “잠업발전에 힘을 넣는다: 황해북도에서.” 2023.1.26.
- \_\_\_\_\_. 2023. “수도 평양에서 용감한 우리 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또 다시 남김없이 떨치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주체 112(2023)년 2월 25일.” 2023.2.26.
- \_\_\_\_\_. 2023.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110여발의 각종 폭발물들을 제거.” 2023.3.10.
- \_\_\_\_\_. 2023.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장에서 미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폭발물 또다시 발견.” 2023.5.11.
- \_\_\_\_\_. 2023. “수도가 달라지고 지방이 변한다, 위대한 당이 펼친 가슴벅찬 시대.” 2023.5.30.
- \_\_\_\_\_. 2023.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들로 눈부신 평양의 모습.” 2023.6.14.
- \_\_\_\_\_. 20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6.19.
- \_\_\_\_\_. 2023.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 인민들이 체감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2023.6.27.
- \_\_\_\_\_. 2023. “끝없이 번영하는 우리 수도 평양.” 2023.7.5.
- 리철민. 2017. 『러명거리,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 평양: 평양출판사.
- 민주조선. 1959. “미국제 폭발물로 인한 사상 사고 도처에서 빈발.” 1959.12.16.
- \_\_\_\_\_. 1987. “미제침략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900여건.” 1987.4.2.
- \_\_\_\_\_. 1987. “고속도로에서 근 141억원의 통행세 수탈.” 1987.6.20.

#### 4. 기타자료

- 곽인옥. 2019. “[곽인옥 교수의 평양위치(20)]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경제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인가?” SDG뉴스. 2019.4.9.  
<https://www.sd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94> (검색일: 2023.9.9.).
- 김혜진. 2020. “북한 도로 현황 및 시사점” Weekly KDB Report. 2020.12.28.
- 노컷뉴스. 2018. ““북한, 고속도로 신설 요청”에 동해선 조사 지연됐다” 2018.12.5. <https://v.daum.net/v/20181205050302137> (검색일: 2023.4.5.).
- 뉴스 1. 2022. “북한, 송화거리·경루동 우표발생... ‘살림집 선전’ 최고조” 2022.7.15. <https://www.news1.kr/articles/?4742397> (검색일: 2023.7.7.).
- \_\_\_\_\_. 2022. “김여정이 밝힌 北 ‘정찰위성’ 시험... 경사궤도 830초 날며 서울·인천 촬영” 2022.12.20. <https://www.news1.kr/articles/4900103> (검색일: 2023.7.7.).
- 데일리 NK. 2022. “연포온실농장 건설 재원 주민이 부담...“4인 가족 2개월 굶어야”” 2022.3.4. <https://www.dailynk.com/20220304-3/>

- (검색일: 2023.4.22.).
- 도시인문학용어 사전. n.d. “도시세” [http://iuhuos.cafe24.com/bbs/board.php?bo\\_tle=dic&wr\\_id=241](http://iuhuos.cafe24.com/bbs/board.php?bo_tle=dic&wr_id=241) (검색일: 2023.9.10.).
- 황진태. 2023c. “원산이라는 블랙박스.” 『Esquire』 4. 2023.4.1.
- Earthdata. 2021. “Korean Peninsula at Night” 2021.1.19. <https://www.earthdata.nasa.gov/worldview/worldview-image-archive/korean-peninsula-at-night> (검색일: 2023.2.10.).
- Estrada, Leif. 2014. “Urbanization in the Amazon” 2014.5.11. <https://www.youtube.com/watch?v=mqdYcOtVqBE> (검색일: 2023.2.10.).
- The Guardian. 2015. “The Pyonghattan Project: How North Korea’s Capital is Transforming into a ‘Socialist Fairyland’” 2015.9.11.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5/sep/11/pyongyang-north-korea-capital-socialist-fairyland-kim-jong-un> (검색일: 2023.3.20.).
- The Washington Post. 2016. “North Korea’s One-Percenters Savor Life in ‘Pyonghattan’” 2016.5.14.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orth-koreas-one-percenters-savor-life-in-pyonghattan/2016/05/14/9f3b47ea-15fa-11e6-971a-dadf918869\\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orth-koreas-one-percenters-savor-life-in-pyonghattan/2016/05/14/9f3b47ea-15fa-11e6-971a-dadf918869_story.html) (검색일: 2023.3.20.).
- UN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n.d.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https://population.un.org/wup/Country-Profiles/> (검색일: 2023.4.10.).
- UNICEF·DPRK. 2018. 2017 DPR Korea MICS Survey: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in DPR Korea, <https://www.unicef.org/dprk/reports/2017-dpr-korea-mics-survey> (검색일: 2023.9.20.).

US NSRB, 1950. United States Civil Defense, National Security Resources Board, [https://www.governmentattic.org/21docs/USCivilDefense\\_NSRB\\_Doc.128\\_1950.pdf](https://www.governmentattic.org/21docs/USCivilDefense_NSRB_Doc.128_1950.pdf) (검색일: 2023.3.20.).

네이버 국어사전. n.d.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B6%80%EB%9F%BD%EB%8B%A4> (검색일: 2023.5.20.).

대한민국 국가지도집Ⅲ. n.d. [http://n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27.php](http://n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227.php) (검색일: 2023.5.20.).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검색일: 2023.5.20.).

Google Earth Pro. n.d.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 김석진·홍제한 |
|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 최규빈 외   |
|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 이지순 외   |
|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 김수암 외   |
|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 이우태 외   |
|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 민태은 외   |
|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 전병곤 외   |
|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 이재영 외   |
|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 정성운     |
|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 정은미 외   |
|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 오경섭 외   |
|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 김진하 외   |
|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 홍제한·김석진 |
|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 정은미 외   |
|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 이상신 외   |
|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 황수환 외   |
|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 나용우 외   |
|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 김형수 외   |
|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 박영자 외   |
|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 이윤진 외   |
|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 신종호 외   |
|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 이기태 외   |
|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 최희식 외   |
|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 박은주 외   |
|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 이재영 외   |

|  |       |
|--|-------|
|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 장철운 외 |
|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최지영 외 |
|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 최지영 외 |
|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김갑식 외 |
|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박주화 외 |
|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 박주화 외 |
|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이무철 외 |
|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정은이 외 |
|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조한범 외 |

〈정책연구시리즈〉

|  |         |
|--|---------|
|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 이상신 외   |
|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 황진태·백일순 |
|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 황태연     |
|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 이상신·이재원 |

〈Study Series〉

|   |  |
|---|--|
|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uk-Jin Kim                              |
|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 Jea Hwan Hong·Suk-Jin Kim                |
|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
|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 Soo-Am Kim et al.                        |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 이규창 외   |
|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 김석진·홍제환 |
|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 이지순·최선경 |
|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 최규빈 외   |
|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 나용우 외   |
|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 나용우·이우태 |
|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 정은이·이해정 |



|   |         |
|---|---------|
| 2022-08 북한의 중산층   | 정은미 외   |
|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 민태은·박동준 |
|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 황수환·권재범 |
|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 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 현승수 외   |
|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조한범 외   |
|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 김상기 외   |
|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 이무철 외   |
|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 장철운 외   |
|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 정성윤 외   |
|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 도경옥 외   |
|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 이재영 외   |
|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 서보혁 외   |
|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 박주화 외   |
|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 황진태 외   |
|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 김진하 외   |
|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 최지영 외   |
|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 홍 민     |
|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홍제환 외   |
|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 김갑식 외   |
|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 박영자 외   |
|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 홍 민 외   |

〈정책연구시리즈〉

|  |       |
|--|-------|
|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 전병곤 외 |
|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 박은주   |
|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 한동호 외 |
|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 홍 민 외 |

〈Study Series〉

|  |                         |
|--|-------------------------|
|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 Hyeong-Jung Park et al. |
|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 Ji Sun Yee et al.       |
|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 Eun Joo Park et al.     |

-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방안  
현승수 외
-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이상신 외
-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민 외
-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23-01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 오경섭 외 |
| 2023-02 |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 정성윤 외 |
| 2023-03 |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 한동호 외 |
| 2023-04 |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이재영 외 |

〈Study Series〉

|         |  |
|---------|--|
| 2023-01 |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br>Ji Young Choi et al.                          |
| 2023-02 |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br>Soohwan Hwang et al. |
| 2023-03 |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br>Sung-Yoon Chung et al.                          |
| 2023-04 |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br>Min Hong et al.  |
| 2023-05 |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br>Dong-ho Han             |

KINU Insight

|         |   |       |
|---------|---|-------|
| 2021-01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 홍 민 외 |
| 2021-02 |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 홍 민 외 |
| 2021-03 |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 최지영   |
| 2022-01 |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 홍제환 외 |
| 2022-02 |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 정성윤 외 |

북한인권백서

|   |       |
|---|-------|
| 북한인권백서 2021                                     | 오경섭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 오경섭 외 |
| 북한인권백서 2022                                     | 이우태 외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 이우태 외 |
| 북한인권백서 2023                                     | 이우태 외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 2021 |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2 |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2023 |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 정기간행물

---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 기타

---

-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해민 엮음
-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 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통일연구원

